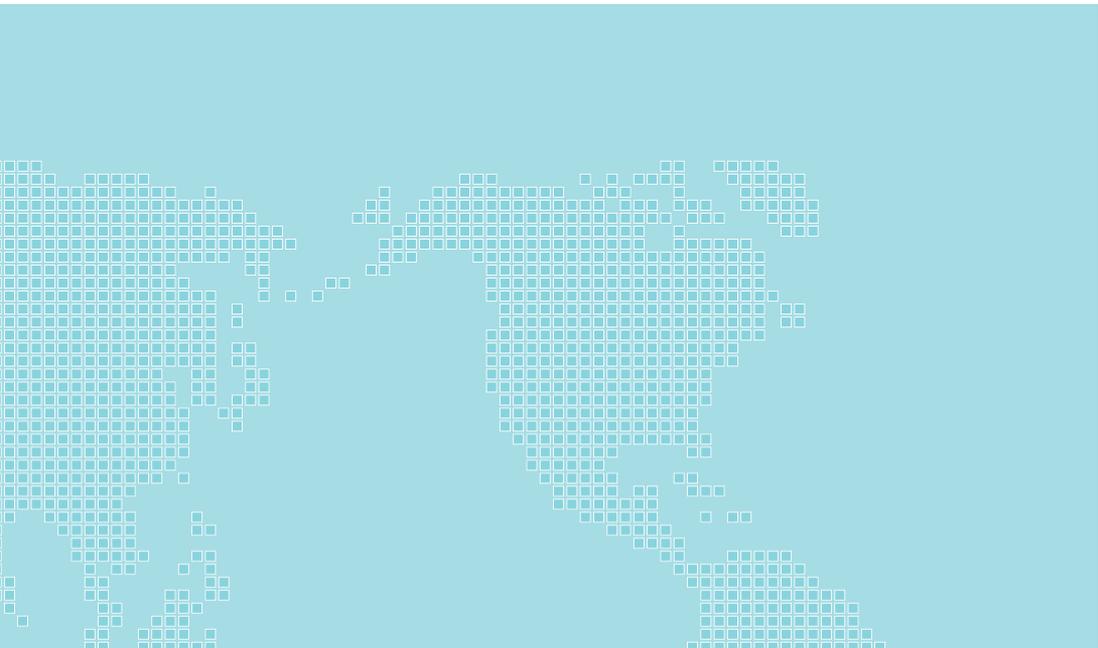


KIET 2013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13

ANNUAL REPORT

KIET 2013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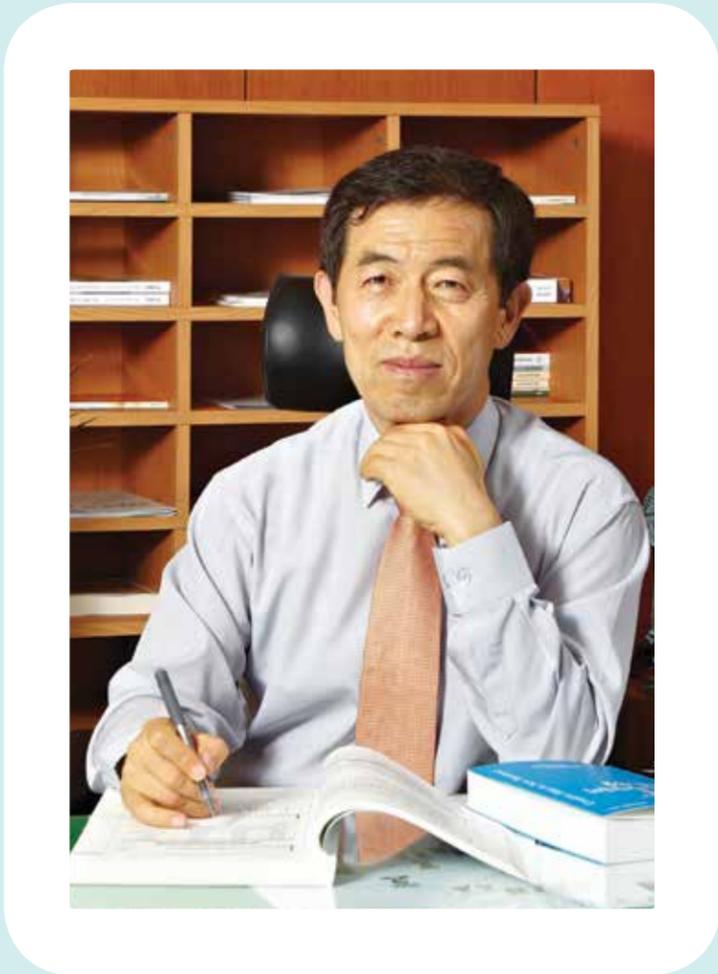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13

ANNUAL REPORT

발간사



김도훈 원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졸(1979. 2)
- 프랑스 파리 1대학 국제경제학과 졸, 경제학 박사(1990. 6)

경력

- 2013. 5 ~ 현재 : 산업연구원 원장(19대)
- 1979. 2 ~ 2013. 4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본부장, 국제산업협력실장, 동향분석실장, 산업정책실장, 연구위원
- 1997. 9 ~ 1999. 9 : OECD 무역국 수석행정관(Principal Administrator)
- 2013. 5 ~ 현재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동반성장위원회)
- 2014. 2 ~ 현재 :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기획재정부)
- 2013.12 ~ 현재 : 고용정책심의회 위원(고용노동부)
- 2014. 6 ~ 현재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국방부 · 산업부)
- 2013. 8 ~ 현재 :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 민간위원(기획재정부)

상훈

- 2004. 3 철탑 산업훈장 서훈(조세의 날 기념)

주요 연구실적

- 한국경제 60년사-산업(공저 : 연구책임자),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 2010. 12
- 한미 · 한EU FTA 발효와 제조업의 대응(공저 : 연구책임자), KIET 연구보고서, 2010. 12
- 한-EU FTA 타결 대비 제조업 수출입효과 분석, KIET 용역보고서, 2009. 4
- 한중, 한일 FTA 산업별 효과 분석(공저 : 연구책임자), KIET 용역보고서, 2008. 12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공저 : 연구책임자), KIET 용역보고서, 2007. 5
- 2010년 산업발전비전(공저 : 연구책임자), KIET 정책자료, 2001. 12

안녕하십니까?

38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연구원은 산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 산업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 왔습니다.

2013년 산업연구원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보람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최대 관심사인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기본 연구방향으로 제시하고, 한국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세계시장 선도형 지역산업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어젠다인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젤기업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대외 산업협력 전략도 연구하였습니다.

우리는 2013년도의 성과에 결코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치밀한 반추와 성찰을 통해 2014년에도 실효성 있는 국가 산업경제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발전 전략을 연구·제시하겠습니다. 창의,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미래산업 육성전략을 연구·제시하겠습니다.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업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지역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지역발전정책과 신흥국에 대한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방안도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은 산업정책연구로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섭니다



CONTENTS

03		발간사
06		2013년도 연구방향
07		I. 주요 연구실적
57		II. 연구관련 활동
75		III. 연구성과 보급·확산 및 지식자산 개방 확대
81		IV. 기관 현황
98		2014년도 연구방향

2013년도 연구 기본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

▶ 연구 기본방향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모색

▶ 중점 연구목표

- 목표 1 한국 주요 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재점검
- 목표 2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혁신과 시장기능 강화 방향 모색
- 목표 3 세계시장 선도형 지역산업 육성 방안 모색
- 목표 4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용창출형 산업·기업 정책방향 모색
- 목표 5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자원 협력 및 개발협력 전략 구축
- 목표 6 산업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효율화 도모

▶ 연구사업 운영방향

-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구조의 정착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방향과 비전 등 산업발전전략을 모색
- 한국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전망을 토대로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R&D 등 혁신의 기반 구축과 시장기능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
- 세계 지역산업과 연계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산업의 글로벌화와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전략 모색
- 산업구조 선진화와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산업·기업구조의 비전과 정책방향 마련
- 선진권, 신흥권, 개도권 등 3개 그룹과의 협력 전략을 차별화하기 위한 권역별 심층 연구 추진
- 중소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중소기업정책 전반을 재점검하여 중장기적인 재편 방안 모색 필요



1. 국가어젠다 연구

국가의 당면 산업경제 어젠다 정책 연구

2. 중장기 과제 연구

미래산업 비전과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전략 연구

3. 단기 과제 연구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4. 수탁과제 연구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1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최고수준의 고령화 진행 속도로 인하여 향후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7~14% 미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20%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조로(早老)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의 조로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한편,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노동생산성 저하 유발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증가 및 감소 지역의 근본적 원인은 출산율보다 인구이동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지역경제성장에는 생산가능인구 이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의 도시권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노동생산성 저하로 지역경제성장 둔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생산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노동력 증가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지역별 생산인구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역 간 성장격차가 수렴되기보다는 오히려 누적적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지역이 저발전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Spread Effect)와 성장지역이 저발전지역의 자본, 인력 등을 흡수함으로써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동시에 존재하여 어느 효과가 더 크고 강한가에 따라 성장격차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경제성장의 저하 및 지역 간 성장격차를 유발한다. 따라서 인구이동과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등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성장 간 상관관계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성장 간 요인분해 분석 결과, 16개 시도의 1인당 소득증가율 차이는 노동생산성 및 노동의 순효과(노동투입 비율 변화+고용률 변화+인구구조 변화)와 명확한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노동의 순효과 중에서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의 노동투입이 이동한 결과로 나타나는 노동투입 비율이 1인당 소득변화율과 높은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고용률은 각 시도의 1인당 소득변화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격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인구구조(생산가능인구/인구)와 1인당 소득변화율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증가에 따라 1인당 소득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회계적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통근인구를 생산인구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1인당 소득변화율과 인구구조 간에는 일정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또한,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연령 진행속도를 고령화로 정의하고 취업자 고령화가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취업자의 평균연령 상승은 숙련근로자가 요구되는 지식기반제조업보다는 비숙련근로자가 많은 주력기간제조업에 더욱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시도별 제조업의 평균연령과 주력기간제조업의 특화도를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부산, 대구, 울산 지역의 경우는 제조업 취업자 평균연령과 주력기간제조업의 특화도가 높아 이들 지역의 노동생산성이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령화의 대체수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고령화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계측하였다. 이를 위해 비숙련노동자의 고령화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외국노동력 유입 가능성과 생산성에 연계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교육 수준,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본장비율에 대해 시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화에 의한 간접적 경로에 있어서도 부산과 대구가 가장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지표들의 종합결과(비고령화 지표)를 1인당 소득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일정 정도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정책적 수단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요인분석을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구구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기 지역경제성장 모형을 설정한 후, 생산인구 증가가 생산요소로서의 역할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생산인구가 고령층이 포함된 총인구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경우에는 적정수준의 요소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 이외에 지역경제성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소비보다는 생산이 많은 계층의 확대(고령층 감소, 생산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저축,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지역 내에서의 생산활동의 영역 확대, 지역 내 실물수요기반 확충, 지역금융자산의 수급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모형에서 생산인구 이외 타 지역의 통근인구를 포함시켜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바, 통근인구는 생산요소로서의 역할만 함으로써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인구 확보와 더불어 거주민 확보가 필요함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인구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생산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과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유소년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은 생산인구 및 고령인구의 증가 여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집적화 및 누적적 인과관계 과정에서 인구구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

았다. 집적화의 대응변수가 모형 내에서 집적화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산인구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으나, 오히려 생산인구에 대한 영향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집적화과정 및 생산인구 증가에 따른 영향이 차별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집적이 생산인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구구조는 지역경제성장에서 나타나는 누적적 관계의 영향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고령인구 증가는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정책제언

① 자본장비율 제고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에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설비투자 저하와 함께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설비투자 기여도 역시 2000년대 이후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생산인구 감소)에 의한 생산성 감소분을 자본장비율 제고를 통해 상쇄시켜야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자본장비율(설비투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 U턴 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생태계를 정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투자처인 신산업을 발굴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혁신활동 강화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국가들은 혁신활동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혁신활동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지역의 혁신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혁신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혁신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지역 내에 혁신활동에 필요한 인재가 아무리 많이 집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기 마련이다. 지역 고학력자들의 수도권 유출 현상은 비수도권의 대부분 지역들이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지만, 특히 앞서 실증 연구에서 나타난 강원 이외 전남과 경남의 경우도 혁신활동 강화가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대목이다. 각 지역들이 우수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혁신활동 강화를 통해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지역산업 구조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③ 창의인재 육성

최근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이다. 이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 구현'이 자리매김했으며, 각 부처는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창조경제가 실현되려면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적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창의인재 추이는 지난 10년간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수, 2013). 2010년의 총 종사자 대비 창의인재 비중은 22.2%로 2000년(22.2%)과 같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창의인재 비중은 30~37%로 우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창의인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창의인재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견인하는 업종이 제조업이라는 점과 향후 우리의 먹거리를 창의인재와 관련성이 많은 ICT산업 등과 같은 첨단제조업에서 찾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창의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창조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향후 창의인재 유치에 경쟁우위를 가진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책임자

허문구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 연구참여자

이상호 연구위원 (동향분석실)
 최윤기 선임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김동수 연구위원(연구조정실)
 박형진 선임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Dai Erbiao 연구부장(일본 국제동아시아연구센터)

1 국가어젠다 연구
국가의 당면 산업경제
어젠다 정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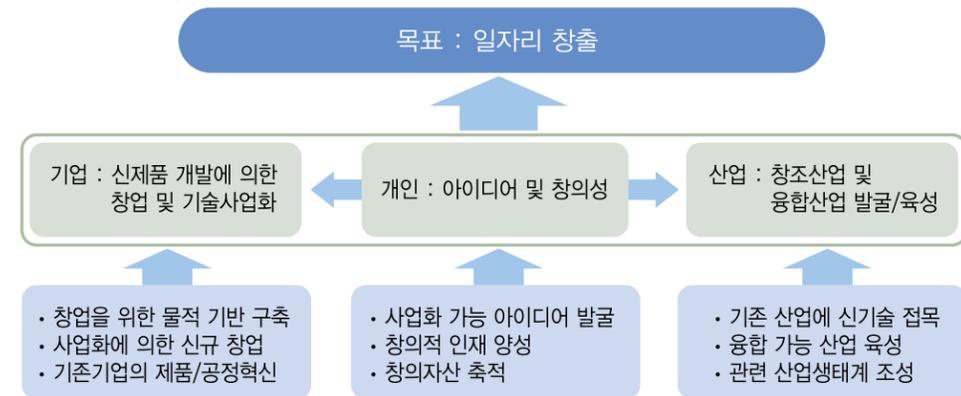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연구

1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구현 역시 그 핵심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정목표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에 정책적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거나 외부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치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내 클러스터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고용 증대 및 성장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는 가젤기업(gazelle firm)을 키워드로 하여 추진되었다. 가젤기업을 어떻게 정치하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Birch고용성장지수로 측정된 고용창출 기여도가 모집단 전체의 상위 10% 이내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가젤기업들이 많이 출현할수록 일자리는 더욱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젤기업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한 규모이고 어떤 산업에 많이 분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각 지역에서 가젤기업을 더 많이 유치, 육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2 가젤기업의 통계적 특성 분석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를 분석한 결과, 가젤기업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2007년 평균 191명 정도의 중소기업이 2012년 371명의 중견기업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60명 미만(60.8%)에서 2012년 120명 이상(54.2%)으로 성장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기업 수 면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 가젤기업이 종사자 수 면에서는 2007년 27.6%에서 2012년 44.1%로 크게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만으로도 우리나라 일자리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젤산업으로 불릴 만한 세부 업종의 분포를 보면 주력기간제조업에서는 기계, 자동차, 섬유에, 지식기반제조업에서는 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등에,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기업지원서비스, 정보서비스, 물류 등에 가젤기업이 많이 분포하였다. 가젤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대전, 울산, 광주 등 대도시에 집중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젤기업과 비가젤기업 등 총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과 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평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입지여건이나 성장여건이 양호한 요인에 대해서는 양 기업 간 평가 차이가 적었으나, 열악한 요인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50점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입지여건 및 성장여건은 가젤기업보다 비가젤기업에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현저하게 낮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수도권소재 기업 혹은 같은 비수도권소재 기업 내에서도 가젤기업인가 비가젤기업인가에 따라 평가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결국 열악한 입지요인이 가젤기업과 비가젤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입지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젤기업은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나 고급인력 확보를 비가젤기업보다 높이 평가하는 반면, 비가젤기업은 저렴한 생산비용이나 특수한 자원부존 등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가젤기업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성장 촉진요인으로 가젤기업은 비가젤기업에 비해 주변 산업이나 타 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 등 기업 외부요인을 강조한 반면, 비가젤기업은 해당 기업 자체의 요인으로 국한하였다.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가젤기업보다 비가젤기업에서 인력구득의 어려움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젤기업의 특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실증분석

본 연구의 제5장에서는 가젤기업과 관련하여 Henrekson(2008)이 제시한 다음과 같은 4대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순고용이 가젤기업으로 불리는 소수의 고성장기업에 의해 창출된다(가설1). 둘째, 가젤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나이가 젊다(가설2). 셋째, 가젤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다(가설3). 넷째, 가젤기업은 첨단기술산업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가설4). 분석 결과, 가젤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라는 제3가설만 기각되었다. 그 나머지 가설, 즉 순고용이 가젤기업으로 불리는 소수의 고성장기업에 의해 창출된다는 제1가설, 가젤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나이가 젊다는 제2가설, 가젤기업은 첨단기술산업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제4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를 상술하면, 가설1의 검정 결과 가젤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의 평균은 26.4%이고 비가젤기업은 1.6%로 나타나 가젤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의 평균이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살펴보면, 유의수준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2는 본 연구에서의 가젤기업 나이(20.58세)와 비가젤기업의 나이(22.81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 통계량으로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젤기업의 나이가 비가젤기업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하여 가설2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가설3은 종사자수를 이용한 기업규모의 정의를 통해 소기업, 중기업, 대(중견)기업으로 유형화하여, 이 기업군 내에서 가젤기업의 분포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χ^2 검정 방법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는 모든 검정 통계량에서 유의확률이 1%이었는데, 이는 교차표에 나타나는 셀(cell) 간에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젤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설3에서 주장하는 '가젤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4에서는 첨단기술산업과 기타 산업에 대해 가젤기업과 비가젤기업으로 나누어 기업의 분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χ^2 검정법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유의확률은 1%로 첨단기술산업에서 가젤기업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가설4는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젤기업의 고용창출 결정요인에 관해 실증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종사자 수 증가율로 하고, 독립변수를 기업부문, 산업부문, 지역부문, 정책부문 등을 대표하는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나이, 기업규모, 가젤지역 여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존재 여부, 수도권 입지 여부, 고용창출지원금의 지원 정도 등이 고용창출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상술하면, 기업부문의 경우는 기업 나이, 종사자 수로 파악한 기업 규모, 기업경쟁력 등 주요 변수 모두가 기업의 일자리 증가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문에서는 주력기간제조업이나 지식기반제조업은 기각되었고, 통계분석에서 고용증가에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던 지식기반서비스업 더미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존재에 관한 5점 척도만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부문 변수 중에서는 계획입지 공급 및 수도권 입지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 이 두 변수를 각각 넣었을 때는 모두 유의적이었으나, 두 변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수도권 입지 더미만 유의적이었다. 특히 수도권 입지 더미가 마이너스를 나타냄에 따라, 비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의 경우가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부문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고용안정지원사업 중 신규 일자리에 실업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환경 개선 시 지원하여 본래적인 의미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고용창출지원금이 가장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정책 방향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할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이 많이 창업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일정한 규모의 준가젤기업이 가젤기업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가젤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양 기업군과 관련된 전체 사업 예산의 점검을 통해 어느 정도

안배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뿐 아니라, 산업별로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그룹을 찾아 국가 전체뿐 아니라 지역별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가젤기업을 정의하는 한편, 기여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창업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기존에 이론적으로 정립된 입지결정이론을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에 적용해 새로운 입지결정요인을 추출하고, 비가젤기업과의 입지결정 및 성장특성 면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정책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정책의 초점을 창업기업과 가젤기업에 안배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한편, 지역산업육성정책에서 누락된 가젤산업의 육성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에서 기업유치 및 기업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텍사스주의 기업유치지구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투자-고용-입지를 고려한 법인세 환급 등 기업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제안을 통해 지방소재 비가젤기업이 가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구책임자

김정홍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 연구참여자

조준모 교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윤수 교수(공군사관학교 국방경영분석학과)
 안준기 부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정윤선 부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이두희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① 국가에너지 연구
 국가의 당면 산업경제
 에너지 정책 연구

셰일가스 개발붐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 대응전략

1 에너지문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셰일가스

주요한 경제행위인 생산과 소비활동을 위해 에너지 소비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탄력적인 선진시장의 에너지 소비와 신흥시장의 공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화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시장의 에너지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또한 국제 에너지시장의 독과점구조로 에너지 안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 원유시장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의 지정학적 요인이 국제 에너지수급을 위협할 수 있다.

고유가와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기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 자원 중 셰일가스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첫째, 전 세계의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매장량이 풍부하다. 둘째, 주요한 매장지역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비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석유와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비용이 낮다.

2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가스 황금시대(Golden Age of Gas) 도래

셰일가스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셰일가스 개발이 성공하면 석유중심의 세계 에너지 믹스가 가스중심으로 전환되고 '가스 황금시대(Golden Age of Gas)'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IEA, 2012). 즉 가격경쟁력을 가진 셰일가스의 대량생산이 석유와 석탄을 대체하여 세계 에너지 수급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셰일가스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은 이미 대량생산을 통한 셰일가스의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미국은 2008년 텍사스 바넷(Barnett)지역에서 새로운 채굴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셰일가스 상업생산을 시작하였다. 미국 천연가스 총생산량 중 셰일가스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었고 미국 내 가스 가격도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미국은 자국 내 가스소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2017년부터 가스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가스관련 인프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성공을 목격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셰일가스 매장지역에 대한 탐사를 시작하고 있다. 세계 최대 셰일가스 매장국가인 중국은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서, 2012년부터 다국적 에

너지기업에 가스광구를 분양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다국적 에너지 개발회사를 유치하며 셰일가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각국의 매장지역에서도 셰일가스 개발이 확산되면서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되고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각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세계 에너지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장량이 풍부하고 생산비용이 낮은 셰일가스의 공급 확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미국의 사례와 같이 각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성공하여 상업생산이 본격화되면 세계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가격도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세계 에너지수급에서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EA(2012)는 천연가스 수요가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음 표에서 살펴보면 천연가스의 소비 증가는 전통적인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 소비의 연평균 성장률 0.8%와 0.5%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가량 빠른 속도이다.

● 연료별 세계 기초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 Mtoe

	1990	2010	2015	2020	2030	2035	성장률*
석탄	2,231	3,474	3,945	4,082	4,180	4,218	0.8%
석유	3,230	4,113	4,352	4,457	4,578	4,656	0.5%
가스	1,668	2,740	2,993	3,266	3,820	4,106	1.6%
원자력	526	719	751	898	1,073	1,138	1.9%
수력	184	295	340	388	458	488	2.0%
바이오에너지	903	1,277	1,408	1,532	1,755	1,881	1.6%
기타 신재생에너지	36	112	200	299	554	710	7.7%
계	8,779	12,730	13,989	14,922	16,417	17,197	1.2%

자료 :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p.53.

주 : *는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예상 연간 가중평균성장률임.

3 셰일가스 산업의 가치사슬과 연관 산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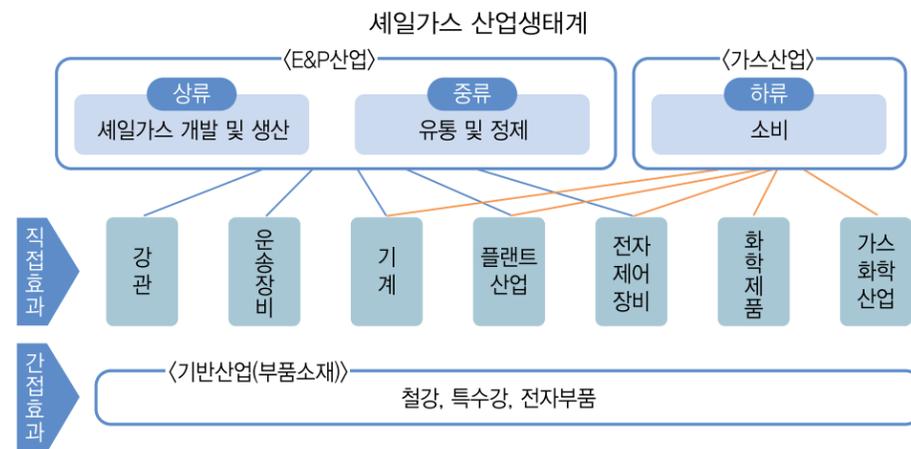
미국에서 성공한 셰일가스 개발붐은 세계 각 매장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세계 에너지 믹스에서 가스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셰일가스의 산업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스 산업의 생태계를 생산-유통-소비 섹터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치사슬분석을 통해 셰일가스 개발붐이 각 섹터에 미치는 영향과 전·후방 연관산업을 분석하였다.

셰일가스산업 생태계는 가스매장지에서 시추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상류(Upstream), 셰일가스의 수송과 저장이 이루어지는 중류(Midstream),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셰일가스가 정제되어 판매되는 하류(Downstream)로 분류된다. 상류 부문은 잠재적인 매장량을 탐사하고 가스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는 섹터로서, 탐사 및 생산(Exploration & Production: E&P)과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E&P 과정에는 굴착(Drilling)작업과 가스 생산시설의 건설도 포함하고 있다. 중류부문은 생산된 셰일가스를 도매업자에

계 수송하여 판매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셰일가스를 정제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각종 물류체계와 저장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순수한 셰일가스를 정제하여 최종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천연가스 제품군으로 변환하여 판매하는 과정이 하류부문이다. 이 단계에서 셰일가스는 최종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정제된다. 또한 파이프라인으로 수송이 불가능한 대륙 간 가스수송을 위해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과정(Liquefied Natural Gas)도 하류부문에 포함된다.

셰일가스의 산업생태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상류와 중류부문의 중심이 되는 E&P산업과 하류부문의 천연가스와 가스화학으로 나누어진다. 상류와 중류부문의 E&P산업과 연관된 산업으로는 플랜트, 기계, 광관, 운송 장비 산업이 있고 하류부문에는 가스화학과 화학제품 산업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셰일가스의 산업생태계 전반에 연관되어 있는 기반산업으로 철강, 특수강, 기계 및 전자부품산업이 있다.

● 셰일가스 산업생태계의 구성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작성.

4 결론 및 정책 방향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붐과 우리나라 대미 수출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셰일가스 관련 제품 수출이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셰일가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 중심인 우리나라 E&P산업의 자본 및 기술적 한계로 지분투자를 통해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기업의 셰일가스 개발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넷째, E&P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믹스와 산업 경쟁력 변화에 대비하고 셰일가스 개발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E&P산업의 자본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자본을 확충하고 현재 지분투자 위주의 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가스전을 인수·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민간 기업의 셰일가스 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민간 기업은 셰일가스 개발의 높은 불확실성과 투자비용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자원개발 펀드조성을 활성화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 시 무역보험공사가 사업실패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셰일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자원 트레이딩(Trading)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자원 트레이딩의 활성화로 국내 에너지 기업은 이윤을 확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저장시설의 에너지자원은 비상시 국내 에너지수급의 안정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북미지역 셰일가스 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략적인 R&D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대 매장국인 중국은 에너지자원의 높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셰일가스 개발을 시작하면서 R&D투자도 늘리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개발 관련 기술의 비교우위를 확보한다면 셰일가스 개발시장에 진출할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셰일가스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확충이 필요하다. 우선 E&P산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학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현장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연구책임자
신윤성 부연구위원(미래산업연구실)

▶ 연구참여자
박광순 선임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실)
곽대중 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실)
정윤선 부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윤정현 연구원(국제개발협력실)
이주연 연구원(미래산업연구실)

APEC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대응 방안

-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한 산업협력 -

1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에 대한 대응책 강구 필요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극동개발부’ 신설,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 승인 등 극동 개발 전략에 필요한 정책들도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제조업분야와 자원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 농림수산업 분야 등이다.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 및 자원 가공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콩 클러스터 및 수산 양식장 개발 등 농림수산업 분야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및 R&D,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인 수송망과 전력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주민복지와 관련된 각종 공공시설 건설 등이다. 외적으로는 자원 가공품 및 에너지 수출을 위한 시장 확보와 더불어 제조업 및 가공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1월 13일 푸틴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통해 체결한 ‘2013년 한·러 공동성명 합의문’에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가 담겨있다.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 문제는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경제협력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한 각종 정책들과 2013년 한-러 정상 회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부문별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대극동 산업협력의 추진 방향을 강구해 보는 데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 및 극동 개발 정책에서 중시하는 혁신적 제조업 및 가공 산업 육성과 관련된 클러스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기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

2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

러시아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다양화에 있다. 2000년대 들어와 러시아 정부는 경제의 다양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경제 정책의 최대 과제로 제시하고, 산업 정책에서도 종합적인 접근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산업 클러스터’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클러스터 정책’이 러시아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정책 등 러시아의 지역별 개발 정책에서 클러스터 개념이 널리 활용되었고,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에서도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바롭스크지방의 항공·조선 클러스터와 같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클러스터 외에도 각각의 지방정부는 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극동지역의 경우 연해지방의 자동차 클러스터, 아무르주의 콩 클러스터, 사할린주 및 캄차카지방의 수산업 클러스터 등이 그 예다.

3 가공산업 육성 중심의 러시아 극동 개발 정책과 클러스터 조성 계획

2013년 3월 러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 계획이 담긴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이하 ‘2025 극동 개발 계획’) 을 승인했다. ‘2025 극동 개발 계획’ 이 제시한 주요 목표는 ① 극동지역의 발전 여건 조성,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제조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의 탈바꿈, ② 역내 인구 성장 및 주민의 수입 증가, 주택 및 복지 인프라 개선 등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2월에 행한 연례교서 연설을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스콜코보 혁신 센터’에 제공하는 특혜와 유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빠르면 2014년 4월 말경 윤곽이 드러날 극동지역의 수출주도형 경제특구는 기존의 내수형 경제특구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갈루스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향후 극동 개발 정책의 방향을 ‘아·태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에 두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수출 상품 생산’, ‘극동 개발부 권한 확대’, ‘극동발전기금’의 조직 개편과 기금 증자 문제 등을 제안했다.

‘2025 극동 개발 계획’은 산업별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산업별 주요 개발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분야는 자원 가공, 철강, 항공·우주 및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제 산업 등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공장 건설과 경제성장 가속화, ② 광물자원 개발 분야는 광물자원 클러스터 조성, 선진기술 이용, 광물 채굴 및 가공 산업 발전, 지역 인프라 및 사회 경제 발전 등, ③ 수송부문은 바이칼-아무르철도(BAM)의 개선, 시베리아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내륙 고속도로 신설 및 정비, 자원 개발과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 등에 필요한 철도나 도로의 지선 건설, 항만 및 공항 정비, ④ 전력 인프라 부문은 가공산업 육성 및 각종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발전소 신규 건설과 기존 발전소 개보수, 변전소 건립, 송전선 정비 등, ⑤ 환경 부문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통한 배출가스 감소, 현대식 오폐수 처리 시설 건설, ⑥ 농업 분야는 아무르주의 콩 클러스터, 지역별 농공 콤플렉스 조성 사업, 수산업 분야는 양식업 육성과 어류 가공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부문별 개발계획 외에도 ‘극동 종합 개발 프로젝트’로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등 23개의 종합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4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대극동 클러스터 협력 전략

대극동 경제협력은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과 극동 개발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 간 경쟁, 남북한 및 동북아 국제관계,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상의 어려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간 협력협정 체결과 ‘한·러 극동 협력위원회’와 ‘극동협력협회’의 구성 등 제도적 협력 기반 조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볼 때 대극동 경제협력의 우선적 추진 대상 사업들은 ‘2013년 한·러 공동성명 합의문’에 명시된 사업들이다. 그중 북한과 직접적인 협의가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남·북·러 3국 간 협의로 풀어나가도록 하고, 한·러 양국 간 합의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되, 소규모 투자로 실익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러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사업들 중 양국 간 협의로 가능한 항공, 자동차, 조선산업 등의 제조업과 농업, 어업, 보건의료, 환경, 과학기술 분야 등의 협력 사업 중에서도 중소 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보건의료, 수산업, 농업, 환경 분야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되 러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지원을 확대하는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① 기술 및 혁신 분야 클러스터 조성 관련 소규모 투자 사업, ② 프로젝트 매니저, 연구 개발 성과의 상업화 등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 ③ 지방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각종 산업별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④ 러시아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플랜트 및 인프라 건설 사업, ⑤ 북한의 노동력과 수송망 활용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의 프로젝트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극동 및 바이칼지역 개발 계획 및 극동 지방정부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클러스터 중 우리와의 협력이 유망한 클러스터는 연해지방의 블라디보스토크시 종합 개발 사업, 연해지방 남부 종합 물류개발 사업, 조선·선박수리 클러스터, 자동차 클러스터, 하바롭스크지방의 항공·조선 클러스터, 대우수리스크섬 종합 개발, 사하공화국의 동북 야쿠티야 광물-원자재 클러스터, 사할린주 연료-에너지 클러스터, 아무르주의 콩 클러스터 및 우주 클러스터, 우도칸 구리광산 기반 광물-원자재 클러스터, 이르쿠츠크 복합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이다.

사실상 중단 상태인 ‘나호드카 한국 공단’을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로 대체하여 추진하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제와 변화된 극동지역의 투자 환경을 감안하되 푸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사항인 ‘혁신’과 ‘클러스터’, ‘극동 개발 정책’을 하나로 묶어 ‘극동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러시아 연방정부의 호응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하나 또는 몇 개의 소규모 시범 클러스터를 조성한 후 단계별로 확대하거나 시범 클러스터를 상호 연계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 연구책임자
김학기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화 과정의 국제비교

② 중장기 과제 연구

미래산업 비전과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전략 연구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 대만, 필리핀, 브라질, 알제리 등 5개국의 중화학공업화의 과정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5개국의 중화학공업화 배경, 추진과정, 정책, 성과 등을 연구하고 차이성과 동일성을 주목하였다.

한 나라의 산업정책은 반복실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의 횡단면적인 국별 비교는 적어도 반복실험이 불가능한 한 나라의 산업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한 국가 혹은 실패한 국가 모두에 미래 산업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내용의 구성과 종합평가

본 연구의 2~6장에서는 각각 한국, 대만, 필리핀, 브라질, 알제리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중화학공업화의 경제적, 정치적 배경, 선정산업 및 기준, 참여기업, 추진주체 및 기구, 산업화 패턴 등 추진방법,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 중화학공업화의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7장에서는 각국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각국 중화학공업화의 성공 혹은 실패요인을 조망하며, 개도국 산업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국의 중화학공업화의 핵심 내용과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이른바 ‘Big Push’ 전략이었다. 한국은 1970년대에 정부의 포괄적·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상벌체제의 인센티브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과잉투자 문제로 합리화를 단행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투자조정 목적은 과잉설비 해소, 생산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기존의 산업 선별적 정책으로부터 기능별 정책으로 전환한 ‘공업발전법’의 제정(1986년)을 기점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성 확대, 혁신 주도형 산업발전으로의 전환, 대외 개방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의 3저 현상(원화의 저평가, 저유가, 저금리)과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중화학산업을 만개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경제력 집중, 경제의 불균형 성장 등 적지

많은 기회비용을 가져오기도 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비교우위가 있었던 1970년대 당시의 비교우위 여건에 도전하여 자본·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는 기나긴 노력이었다.

대만은 1970년대 경제 불황기에 내수 부양 및 기발전된 다운스트림 분야와의 후방통합을 위한 기초소재산업 육성 차원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중화학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다. 당시 민간기업의 투자역량이 부족하여 정부는 공기업을 통한 투자의 사회화를 모색하였다. 초기단계에서 공기업을 통한 투자의 사회화는 자유화시기인 1980년 이후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화학공업화는 공기업 형태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한국보다는 의사결정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덜 포괄적이었다는 점에서 'Big Push' 전략은 아니었다. 또 대만은 1980년대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대응하여 기계, 전자 등 기술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중화학구조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였다.

필리핀도 여타 개도국들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는 수입대체형 산업육성, 1970년대에는 수출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직 중화학공업의 생산기반 및 혁신의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필리핀의 산업발전전략은 경상수지의 위기 및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즉흥적으로 변해 일관성이 없었다. 예컨대 1970년대의 Progressive Manufacturing Program, 1980년대 초의 11대 주요 산업 육성 전략, 1998년의 기술집약적 산업발전전략들은 마르코스 족벌의 지대추구행위 등 정치적 변화로 좌절되었다. 또 정책적으로 중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도 부족했다. 예컨대 조선산업의 경우 조선제조업보다는 해운업의 이해관계를 우선했고, 자동차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시혜에 기댄 채 자국 부품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실패했다. 또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내세울 만한 정책도 없었다. 6장에서 필자는 필리핀의 중화학공업화가 실패한 요인으로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시장 자유주의, 인센티브 시스템의 부족 및 불합리성, FDI에 대한 과도한 의존, 산업화를 주도하는 지도자의 애국심 부족 등을 꼽고 있다.

브라질은 중화학공업화의 대상 산업들 대부분에서 오늘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실패하였다. 브라질의 중화학공업정책에는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었다. 과도하고 기한 없는 보호주의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혁신에 대한 노력 없이 내수시장에 만족하게 만들었다. 공공정책도 생산능력확대에만 중점을 두고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러한 요인은 예컨대 세계 2위였던 브라질의 조선산업이 자유시장기인 1990년대에 사라지게 만들었다. 5장에서 필자는 브라질 중화학공업화의 실패요인으로 명확하지 못한 지나친 보호장벽과 한시적 법안들의 미비, 투입요소 및 신기술 채택에서의 장벽 등을 꼽고 있다.

알제리는 1962년 독립 이후 사회주의적 이념에 따라 국가주도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1980년 전후 기업의 위기, 국가 재정의 위기, 대외 채무 위기 등 3중의 위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 시스템 위기로 귀결되었다. 알제리 공업화 전략의 결과는 국가-국영기업 중심의 사회주의적 방식과 석유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자원부국적 특성, 공업화 경험이 일천한 개도국적 특성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금의 원천이면서 발전전략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 자원이자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의 중화학공업화 경험은 자원부국에서 국가-국영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산업다각화

를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자원의 저주'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참고해야 할 타산지석이다.

3 개도국 산업정책방향에의 시사점

본 연구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학공업의 육성지 및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둘째, 인센티브 시스템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 셋째, 산업발전단계에 부합하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산업의 후방부문인 중화학공업의 발전은 다운스트림인 경공업의 발전에 후행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산업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화학공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원의 집중과 규모의 경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원의 집중을 통한 투자기반의 조성 이후 혁신주도형 발전패턴으로 전환한 것도 한국과 대만의 공통점이다. 다섯째, 보호무역의 한시성과 예측성 확보가 중요하다. 여섯째, 중화학공업화를 위해서는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확대 노력만큼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을 종합하면, 중화학공업화 나아가 더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교우위 및 미래의 비교우위 잠재력을 잘 이끌어내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 연구책임자
오영석 선임연구원(산업경제연구실)

2 중장기 과제 연구

미래산업 비전과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전략 연구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외 교역환경 악화로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중심을 점차 내수확대와 산업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과 구조 변화는 무역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내수용 일반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간재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소비재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간재 위주의 가공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비시장의 확대, 그리고 한·중 교역구조상의 구조적 변화 등에 여하히 대응하느냐가 향후 지속적인 대중 수출확대에 중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과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 수출구조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과 구조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가 중국의 무역구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구조의 방향 정립과 관련하여 중요하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입구조 변화, 가공무역 억제조치, 산업구조고도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입수요함수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향후 유망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게 될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을 분석하였다. 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의 특징을 살펴본 후, 중장기적인 소비재 시장규모를 전망해 볼 때 함께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나 소비재의 품질고도화 등이 소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최근 들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를 내수용 수입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유망품목 및 한·중 FTA 협상에서의 관심품목을 발굴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3 시사점 및 정책과제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는 무역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내수용 일반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중간재 교역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소비재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간재 위주의 가공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3년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시장에서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등 대중 수출이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중간재 수입비중의 하락이 소비재 비중 상승보다는 1차산품의 비중 하락에 기인하고 있어 중간재 수입시장이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며,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간재 위주의 대중 수출구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중간재 분야의 수입이 선진국 경제의 부진으로 수출용 수입은 부진한 반면, 내수 확대책 등으로 내수용 분야의 수입은 크게 확대되고 있어 내수용 시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도 중국의 소비재 수입 확대가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소비재의 대중 수출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내수용 중간재 수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가 관련 기계류 수입의 확대에 이어지고 있는 등 중간재 및 자본재의 대중 수출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선진국들이 중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품질에 상당히 의존하는 고도화된 시장으로, 이러한 시장 특성상 우리나라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은 중국경제의 성장과 소비비중 증가 등으로 향후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이 중간재 시장과 함께 향후 우리의 유망시장으로 부상될 것임을 시사한다.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모든 품목에서 수입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품목별 소비재 수입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에 따르면, 인구구조의 변화나 소비비중 확대보다는 도시화의 진전이 품목별 수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도시화의 진전 속도와 도시인구 구조 변화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략적 측면에서는 대중 수출품목의 품질(고도화) 수준을 제고시킨다고 해서 중국의 수입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고려한 품목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에 맞추어 수출용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내수용시장 진출로 확대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재 시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산업발전 및 정책변화를 감안한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간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핵심은 중간재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 경쟁우위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여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중 시장정보 지원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특정 소비계층의 부각 가능성과 도시 인구의 소비패턴 변화, 그리고 도시화가 진전되는 2~3선급 시장의 지역별 특수성에 대한 정보는 소비재 시장 진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 내 소비재 유통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유통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유통벤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수요자 입장에서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수 시장 진출에 한·중 FTA 협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국과의 관세양허협상에서 우리나라 관심품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비관세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대중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원산지 증명, 통관절차, 인증제도,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협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연구책임자
신현수 연구위원(동향분석실)

▶ 연구참여자
이상호 연구위원(동향분석실)
김재덕 부연구위원(산업통상분석실)

서비스화가 한국산업의 연관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② 중장기 과제 연구
미래산업 비전과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전략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서비스화의 진전은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외형적·양적 비중 증가뿐 아니라 서비스산업과 여타 산업, 특히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 중간재 상호의존관계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의 구조적·질적 변화를 수반한다. 그런데 경제의 서비스화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그 대부분이 부가가치나 고용, 생산성 등 외형적 거시지표 분석에 머물고 있어 서비스화에 내포된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을 단순히 서비스 비중 확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로 보는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 상호연관의 심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연관분석의 방법론을 응용한 여러 가지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산업 간 연관관계의 변화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상호연관, 나아가 산업 전체의 연관의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또 이것이 경제성장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화가 앞서 진전된 OECD 주요 선진국 및 중국과 비교함으로써, 산업연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산업의 서비스화가 현재 어떠한 단계에 도달해있는지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8개의 장과 1개의 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서비스화의 원인 및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및 한국경제에 대한 적용결과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비스화의 영향을 먼저 산업구조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내총생산(부가가치), 최종수요, 고용, 가격 및 생산성 변화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화 추이와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산업구조의 외형적 변화 외에 각 산업부문의 생산이 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에 어느 정도 의존하여 왔는지, 다시 말해 생산과정의 서비스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는지

를 보기 위해 부문별로 중간재 투입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정도를 주요국과 비교해보기 위해 OECD 주요 10개국 및 중국을 대상으로 부문 간 중간재 투입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제5장에서는 4장에서 살펴본 중간재 투입구조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생산유발의 연관 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본 장에서는 부문 차원의 분석 외에 업종별로도 생산유발의 연관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생산유발의 연관구조에 관한 국제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제6장 보론에서는, 제5장에서 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생산유발의 연관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역행렬계수 요인분해 모델을 이용하여 생산과급효과를 재화부문과 서비스부문 내 자체활동에 의한 과급효과와 양 부문 간 상호과급효과 등으로 나누어 계측하고, 서비스경제화의 흐름 속에서 각 부문의 활동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성장요인 분해 모형 및 이를 응용한 원천산업 분해모형을 이용하여 수요측면에서의 산업별 성장요인 및 원천산업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산업 전체로 본 생산유발의 강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기 위해 전산업연관도의 변화를 분석한 다음, 전산업연관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수입중간재가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 10개국 및 중국의 전산업연관도 비교를 통해 각국의 서비스화 수준과 산업 간 연관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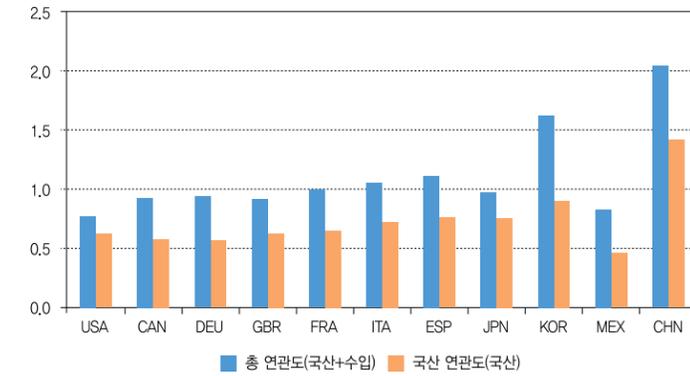
3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경제의 서비스화는 명목 부가가치나 소비,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뿐 아니라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간 연관관계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의 질적·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분석기간 중 한국산업 전체로 본 생산과정의 서비스화는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러한 생산과정의 서비스화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생산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또 서비스 투입계수나 생산유발계수, 전 산업 연관도 등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및 국제비교 결과는, 한국의 경우에도 앞으로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서비스화가 더욱 진행될 경우 산업 전체의 총체적인 생산과급의 강도가 점차 약화됨으로써 전체 경제의 생산성 및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또한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는 Baumol(1967) 이래의 보편적 명제를 산업연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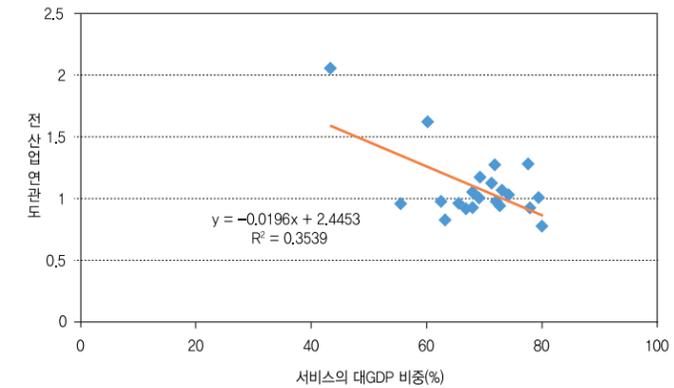
향후의 산업구조정책은 이러한 서비스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서비스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향후의 산업구조정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전 산업 연관도의 국제비교(2009년)



● 서비스화와 전 산업 연관도 간의 관계



둘째, 국내산업의 생산통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 중간재산업의 국산대체 및 경쟁력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병행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연관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중간투입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전방연쇄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생산자서비스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서비스화로 인해 산업 전체의 생산성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내 경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연구책임자
이건우 선임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원)

▶ 연구참여자
하봉찬 교수(부경대학교)

2 중장기 과제 연구
미래산업 비전과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전략 연구

제조업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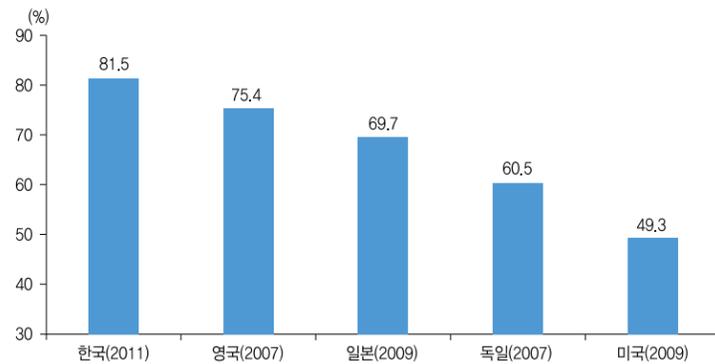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총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종사자 수 1~9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 제조업 총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1.5%이며,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 1〉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영세소기업 비중은 지난 10여년간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

영세소기업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 혁신역량 등이 취약하다. 따라서 전체 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 즉,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은 경제 전체로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혁신역량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원인과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 〈그림 1〉 제조업 영세소기업 비중의 주요 선진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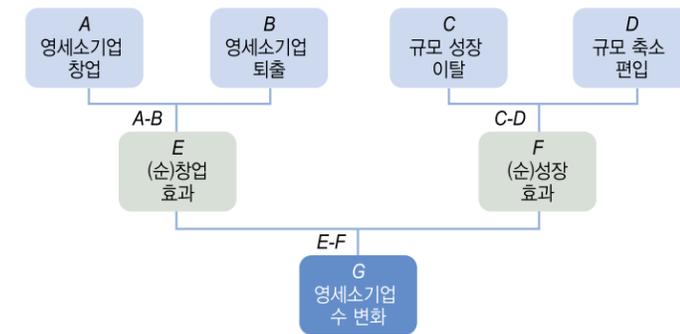


자료 : 한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일본, 「2009년 경제센서스조사-기초활동」, 일본총무성 통계국.
미국은 Statistics of UB Business, 영국, 독일은 OECD Stat Meta data.
주 : 영세소기업은 종사자 수 1~9인 사업체임.

2 주요 연구내용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세소기업 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식별하고(〈그림 2〉 참조), 각각의 요인이 영세소기업 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요인별로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 〈그림 2〉 영세소기업 수의 변화 원인 분해



실제로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그림 3〉에서 보듯이, 1995~2011년 사이에 영세소기업 수의 증가율은 성장효과보다는 창업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이 창업효과(다산·다사형 생태계)에 크게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원인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해진 이유는 창업효과 이외에도 금융제약 요인과 독과점화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5~2010년 6년간 주요 재무지표가 연속적으로 입수 가능한 제조업의 6,165개사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제약 요인이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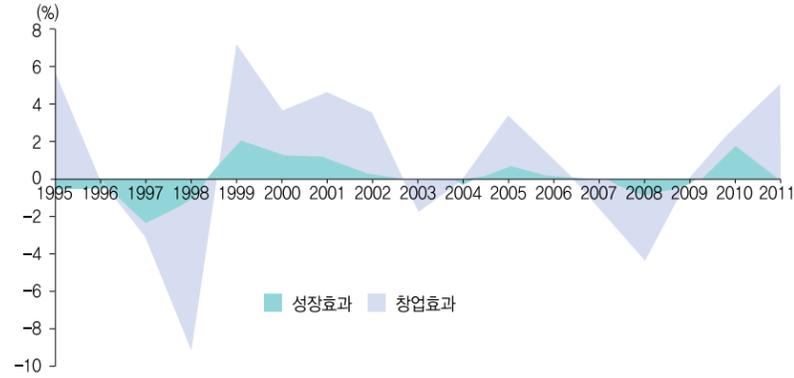
다음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①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② 시장규모가 작고 성장성이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독과점 현상 및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심화가 관련성을 가지면서 함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은 우연히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창업효과(다산·다사형 생태계), 금융제약 요인, 독과점화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차적으로 창업정책이 창업기업 수를 늘리기보다는

● <그림 3> 영세소기업 수 변화에서의 창업효과 및 성장효과



주 : 제조업 전체 창업·퇴출의 94%가 영세소기업 범위(중사자수 1~9인)에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작성한 것임.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신생기업의 93.8%, 소멸기업의 94.9%가 영세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좀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OECD 여러 나라에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은 고성장기업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고성장기업정책은 전통적인 창업정책과는 달리 신생 기업 수 증가보다는 신생·기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정책적 논의가 활발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및 중견기업정책 등도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독과점화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틀 속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으로 인해서 중견기업 부족 현상이 실제보다 과장되고, 독과점화로 인해서 중견기업 부족 현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연구책임자
조덕희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 중장기 과제 연구보고서(2013)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지방정부의 지역산업육성정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지방정부 세출분석을 중심으로	장재홍
세일가스 개발붐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별 대응전략	신윤성
바이오경제시대의 정책과제	최윤희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와 고용성장	지민웅
서비스화가 한국산업의 연관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건우
KIET 산업·거시경제 단기 계량전망모형 개발 연구	이진면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rocesses and Policies for Developing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오영석
제조업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에 관한 연구	조덕희
공유가치창출(CSV)을 통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방안	이두희
대형유통업체 구매협상력의 효과분석	신종원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주현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이상규
APEC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대응 방안 :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한 산업협력	김학기
한·일 산업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사공목
창조형 서비스업의 스피로버 촉진방안 연구	김홍석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 연구	김정홍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매물류시스템 개선방안	김숙경
한·중 태양광산업의 경쟁구조 분석과 협력방안	주대영
디자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성열용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송우경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허문구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국내 산업용 섬유 발전전략	박훈
철강 수요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 자동차,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정은미
자원개발서비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시사점	이원복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신현수
중국의 식품시장 전망과 국내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이준
ISP(Innovation Sharing Program)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심영섭
개도국의 녹색산업 및 환경주류화 지원전략 연구	임소영

e-KIET산업경제정보

“본원은 ‘e-KIET산업경제정보’를 발간하여 시의성 있는 산업경제 현안 이슈의 정책대안을 정부 각 부처와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단계 과제 연구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 저자
허문구 연구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조현승 연구위원 (서비스산업연구실)
김동수 연구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

-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
 - 의료관광은 진료비용이 저렴하고 의료서비스 및 휴양 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시아 지역의 관광지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이 선두 그룹을 형성
- 의료관광산업의 세계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의료관광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른 성장세 시현
 - 우리나라는 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로 2011년에 건강 관련 여행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
-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의 종합경쟁력은 OECD 34개국 중 19위를 차지
 - 시설·장비 2위, 의료서비스 4위, 기술수준 9위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하여 상당한 경쟁력 보유
 - 그러나 의료인의 양적 규모인 인적 자원은 31위, 관광산업 성장성은 33위로 최하위 수준에 불과
 - 부문 간 현저한 격차로 인해 의료관광산업의 불균형 구조 심화
- 향후 우리나라가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지원, 국제네트워크 활용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경쟁국과의 우위 확보를 위한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시범사업 추진
 -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 설립을 통해 효율적 지원으로 전환
 - u-Health 서비스 허용범위 확대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가속 및 지속적 수익 창출
 - 국제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내 의료 인력난 해소, 한국형 의료시스템 수출 확대 등

중국 성장 둔화의 배경과 전망 및 국내 실물경제 영향

3 단계 과제 연구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저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
신현수 연구위원
민성환 연구위원
이상호 연구위원 (동향분석실)

-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존의 투자 및 수출 주도형 성장 방식의 한계와 그에 대응한 중국 정부의 구조전환 정책 추진에 기인
 - 경제구조적 요인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약 4조 위안, GDP 대비 10%)의 후유증과 투자 및 수출 주도형 고도성장 방식의 한계 노정에서 비롯
 - 또한 정책적 요인으로서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경기부양보다 경제구조 전환 및 구조조정애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점도 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
- 고성장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세계경제 내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 수출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국경기 둔화는 직간접적으로 국내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중기적으로 7% 내외의 수준으로의 완만한 성장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6%대 미만의 일시적 하드랜딩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
 - 중국경제 성장률의 1%포인트 하락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약 0.08%포인트 낮추고, 우리나라 전 산업 수출 및 부가가치에는 각각 1.3%와 0.3%의 감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 업종별로는 대중 수출이나 대(對)자원보유국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 중국 성장둔화나 경기 급락 가능성에 대비한 단기적 차원 및 중장기 관점에서의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적으로 중국발 리스크를 관리·대비하는 체계도 구축할 필요
 - 중국경기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 악화 시 거시정책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중소기업 및 피해가능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 중장기 관점에서는 내수주도 확대 및 가공무역 억제 등 중국경제의 구조전환에 대비하여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전환하고, 내구 소비재와 고급 비내구소비재, 서비스 등에 대한 진출을 확대

● 중국성장 둔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중국GDP 1% 포인트 감소	
	대세계 수출	산업별 부가가치
디스플레이	-5.29	-2.93
반도체	-1.12	-2.54
자동차부품	-2.27	-2.10
석유화학	-1.44	-1.47
자동차	-3.02	-1.11
조선	-1.78	-0.98
일반기계	-1.52	-0.90
철강	-1.56	-0.73
무선통신기기	-1.68	-0.66
섬유	-1.32	-0.52
가전	-1.30	-0.09
전체	-1.29	-0.33

주 : 산업연구원(KIET) 추정.

③ 단기 과제 연구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엔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저자

신현수 연구위원
이원복 부연구위원
이상호 연구위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
김재덕 부연구위원
(산업통상분석실)

- 일본 아베정권 출범 이후 엔화 약세가 가속화된 반면, 원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은 작년 6월 초 대비 주요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향후 엔/달러 환율 상승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원/달러 환율 하락기조에 따라 원/엔 환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 원/엔 환율 1% 하락은 당해년 한국의 총수출을 0.18%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
 - 수출산업구조 변화, 제품차별화 진전으로 원/엔 환율 하락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축소
- 부문별로는 엔저에 따른 수출 영향은 자동차, 철강, 가전, 섬유산업과 환율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서 클 것으로 예상
- 원고/엔저 기조 장기화에 대비, 기업은 수출구조 고도화와 대일 수출 경쟁력 재편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10대 주력산업 수출에 미치는 엔저 영향

	산업	요인
수출 둔화/ 감소	자동차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어 부정적 영향 우려
	철강	주요 시장에서 한·일 간 높은 수출 경합도
	가전	프리미엄 완제품·부품에서 일본과 경쟁관계
	섬유	화섬사, 화섬직물 등 화섬제품의 주력 수출시장에서 한·일 간 높은 수출경합도
영향 미미	정보통신 기기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해외생산비중이 높아 영향 미미
	디스플레이	일본의 시장점유율 미약, 모바일기기용 소형패널에서 경쟁 확대가 예상되나 수요 증가로 영향 미미
	반도체	한국의 경쟁우위 확보로 영향 미미
	석유화학	한국과 일본과 수출 주력제품이 상이하여 영향 미미. 일본은 고부가 하이엔드 품목 위주인 반면 한국은 중저가 범용제품 위주
	일반기계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완제품 수출에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NC장치 등)의 수입단가도 인하되므로 상쇄효과 발휘
조선	수주와 수출 간 시차, 제품 차별화(한국은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플랜트, 일본은 벌크선이 주력품목)	

자료 : 산업연구원(KETI).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중소기업 성공요인이 체화된 정책 긴요

③ 단기 과제 연구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 저자

이영주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 동력 확충과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이 긴요
-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은 낮은 글로벌 지향성, 글로벌 경쟁력 열위 등 구조적 문제로 중소기업 육성 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한 실정
 - 2012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은 53.4점에 불과한 수준
 - 2012년 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응답기업 중 12.0%에 불과할 정도로 그 저변도 취약
- 히든 챔피언 육성의 해법을 찾고자 실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글로벌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글로벌 시장 확장성, 글로벌 고객 지향성, 글로벌 혁신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의 성공 요인이 체화된 정책운영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지속 가능한 글로벌화 능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이들의 지원 수요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 다양한 관련 사업의 복합·연계지원을 위한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주요 지원 사업 재편을 통한 성장사다리 구축으로 중소기업 저변 강화
 - 지원 사업에 선발된 기업의 의무요건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 도모

● 글로벌 잠재력 보유 중소·중견기업 비중

	글로벌 경쟁기업 대비 글로벌 혁신 역량	글로벌 경쟁기업 대비 글로벌 역량	
		열위	우위
글로벌 경쟁기업 대비 글로벌 혁신 역량	우위	47 (12.0%)	47 (12.0%)
	열위	228 (58.0%)	71 (18.1%)
전체		275	118

③ 단기 과제 연구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경력경로 연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부족 해소 방안

▶ 저자
최희선 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실)

-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하 SW인력)에 대한 낮은 보상수준, 인사관리체제, 기업문화 등의 원인으로 SW 고급인력 부족 현상 심화
 - SW인력 중 SW개발전문가, 웹 전문가에 대한 미충원율은 각각 33.0%, 42.5% 수준으로 전 직종의 미충원율 10%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직능수준이 높은 고급 인력의 부족률이 높은 편
 - 이것은 동 산업에 중소기업이 많아 보상수준이 낮고, 인사관리체제, 기업문화 등으로 SW인력이 업계에서 빨리 퇴출하기 때문
 - SW 고급인력의 부족은 이들의 회사 경력경로가 짧은 데에도 기인
- 석박사급 신규 인력양성 확대와 함께 고급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 해소에 기초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필요
 - SW인력의 회사 경력은 전통 제조업 기술직 혹은 사무관리직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회사 경력경로 연장을 통한 고급인력 해소 방안이 필요
 - SW인력의 회사 경력경로 연장을 위해서는 재교육훈련의 확대와 함께 기술자 트랙 도입 · 확산이 필요하며, 보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
 - 특허를 실시하여 생긴 이익이나 양도하여 얻은 로열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직무발명제도 도입 · 확대를 통해, SW인력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이고 보상금에 기초한 창업 기회를 확대
 - 회사 경력이 짧고 평생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칭 “중소기업 기술인력 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

③ 단기 과제 연구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 현상, 원인, 함의

▶ 저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
(동향분석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 가계와 기업소득 간의 증가율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
 -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의 2배 수준으로 가속된 반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고도성장기의 약 1/4 수준으로 급락
 - 가계와 기업 간 성장불균형은 외환위기 직후(1998~2002), 그리고 2007~2010년간의 두 기간에 걸쳐 크게 확대

● 가계소득, 기업소득, GNI 증가율 변화 추이 비교

	1975~97	2000~10	2000~06	2006~10
가계소득	8.1	2.4	2.8	1.7
기업소득	8.2	16.4	14.9	18.6
GNI	8.9	3.4	3.8	2.8

자료 : 한국은행 ECOS.
주 : 1) 가계소득은 개인 순가처분소득, 기업소득은 법인(금융 및 비금융법인) 순가처분소득.
2)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실질: GNI 디플레이터로 실질화, %).

- 가계 기업 성장불균형의 원인은 노동분배율 하락, 자영소득 침체, 조세 및 준조세 요인(기업에 유리한 조세 구조변화)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
 - 이들 요인은 다시 외환위기 이후 경제정책 및 제도의 신자유주의적 기초 강화와 글로벌화 진전,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친기업적 정책, 외환위기 직후 및 2007년 이후의 환율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심각한 가계 기업 성장불균형은 가계소득 부진을 통해 내수부진, 체감성장 부진, 가계부채 문제 등 주요 경제현안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 2000~2010년간 경제성장 대비 가계소득과 내수의 상대적 부진 정도는 한국경제가 OECD 중 가장 큰 편
- 균형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가계 · 노동 · 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

3 단계 과제 연구

현안 경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청년 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 저자
장원준 부연구위원
안영수 연구위원
(방위산업연구실)

- 주요 무기 수입국들은 방산절충교역을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주요 창구로 활용 중
 - 절충교역은 무기 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출국 또는 해외업체로부터 무기수입에 따른 반대급부를 받는 국가 간 교역의 한 형태
 - 최근 한국으로부터 KT-1 수입을 결정한 페루는 절충교역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요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매우 적극적
 - UAE, 이스라엘, 인도, 네덜란드, 남아공 등도 수출물량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수출 산업화를 추구하고
- 현재의 방산 절충교역을 'K-Move'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 시, 최대 1만 8,400여 명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 청년 실업의 약 6% 해소가 가능할 전망
 - 향후 5년간(2013~2017)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 등 대규모 무기수입 추진에 따른 절충교역 규모는 최소 63억 달러 규모로 분석
 - 절충교역 금액의 10%를 해외 청년 일자리용으로 전환하고 부품 수출 비중을 60%로 상향 시, 총 3만 765명의 신규 일자리 및 1만 8,400명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정부는 'K-Move' 확대를 위해 현행 방산 절충교역 제도를 '기술 획득' 중심에서 '일자리 및 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해 절충교역 규정의 개정, '방산절충교역 K-Move 센터(가칭)' 설립,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부품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등의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방산 절충교역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전망(2013~2017)

단위: 명

	해외 청년 일자리 (절충교역의 10% 전환)*		부품수출 일자리 (절충교역의 60% 전환)**		합 계	
	가치승수 3	가치승수 2	가치승수 2	가치승수 1	최소	최대구
신규 일자리 창출인원	8,750	13,125	8,820 (2,646)	17,640 (5,292)	17,570 (11,396)	30,765 (18,417)

자료: 방위사업청(2012), 절충교역 지침서(제17조) 참고, 산업연구원 작성.

주: * WEST사업에 요구되는 한국 대학생 체재비(24,000\$)에 절충교역 가치승수를 곱한 절충교역 인정가치로서 실제 금액의 3배 범위 이내 인정기준 적용.

** 실제금액의 2배 범위 이내 인정기준 적용.

() 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예상 규모임.

e-KIET 산업경제정보(2013)

제목	저자	발행일
새해 한국경제에 비란다	송병준	2013.01.01
한국 경제의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현상, 원인, 함의	강두용	2013.02.05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양현봉	2013.02.08
청년 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장원준	2013.02.19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법인설립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양현봉	2013.03.05
엔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현수	2013.03.19
전자바우처 도입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구조 변화: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조현승	2013.03.26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허문구	2013.04.04
자동차부품 중견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이항구	2013.04.25
스포츠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분류 제안: 스포츠시장 가치망을 중심으로	김화섭	2013.05.07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 강소기업 성공요인이 체화된 정책 긴요	이영주	2013.05.09
2013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동향분석실	2013.06.28
2013년 하반기 주요 산업 전망	성장동력 산업연구실	2013.06.28
중국 내수 식품시장의 성장 전망과 대응과제	이준	2013.07.04
이란 신정부 출범 이후 대이란 교역 전망	빙현지	2013.07.16
경력경로 연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부족 해소 방안	최희선	2013.08.07
엔저의 영향과 대응: 기업 조사 결과	강두용	2013.08.29
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강화로 국방예산 효율화해야	안영수	2013.09.11
중국 성장 둔화의 배경과 전망 및 국내 실물경제 영향	강두용	2013.09.13
모바일 AP시장의 글로벌 경쟁구도 변화와 시사점	김중기	2013.09.17
생산과정에서 본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추이와 시사점	이건우	2013.10.11
2014년 거시경제 전망	동향분석실	2013.11.28
2014년 산업 전망	성장동력 산업연구실	2013.11.28
미래 의료기기산업의 중심 - 인공심장	황원식	2013.12.10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역동성: 미국·일본·중국과의 비교·분석	윤우진	2013.12.13
SK와 GS의 외국기업 합작투자 효과 분석	장윤중	2013.12.16
세일가스 개발·확산이 플랜트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박광순	2013.12.19
미래산업의 열쇠 - 뿌리산업	김상훈	2013.12.23

수시과제연구

“본원은 ‘이슈페이퍼’ 등 수시과제연구를 통하여 시의성 있는 산업경제 현안 이슈의 정책대안을 정부 각 부처와 산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 과제 연구

게임시장의 규제가 산업생태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 게임산업 관련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는 게임 이용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제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다양한 규제 현황 및 이들 규제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특히, 게임산업 규제 중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제적 섯다운제를 대상으로 그 정책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중차분모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이용 시간에서 주중과 주말에 각각 약 18분과 20분 정도의 이용시간 감소가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강제적 섯다운제의 시행이 실제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 총시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 확보 여부를 떠나 하루에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25%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강제적 섯다운제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야시간대의 게임시간을 줄여 청소년 수면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강제적 섯다운제의 실효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실제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게임이용시간 감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실효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불완전한 사전적 규제를 고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섯다운제와 같이 게임중독 방지와 같은 긍정적 취지를 가진 규제라 할지라도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강제적 규제가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규제로의 정책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은 기존의 규제정책이 유명 해외게임 제작회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만 적용되어 이로 인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산 게임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 평판을 제공하여 해외수출을 어렵게 하거나, 성인용 게임 위주의 제작을 부추기는 왜곡된 행태의 시장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책임자

박문수 연구위원(서비스산업연구실)

▶ 연구참여자

고대영 부연구위원, 박정수 연구위원(서비스산업연구실)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 고용결정에 내부화하기

수시 과제 연구

현대 사회에서 고용은 소득 창출이라고 하는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사회적 안정의 제고, 불평등의 완화 등)을 아울러 갖는다. 이 때 고용의 사회적 기능에서 창출되는 가치(즉 고용의 사회적 가치)는 고용결정 주체인 기업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향유(부담)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업 고용결정에는 외부성이 수반된다. 고용 외부성은 특징적으로 양면성과 경기역행적 가변성을 가진다. 한편 고용 외부성은 고용의 사회적 기능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정부재정을 통한 실업부조나 유효수요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글로벌화는 기업의 이윤극대화과 국민경제의 최적화 간의 상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용외부성의 개연성을 확대한다.

이 같은 고용 외부성의 존재는 외부성의 보정을 통해 고용의 사회적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고용정책의 새로운 논리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원리와 고용 외부성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서, 고용조정권 거래제도의 구상을 제시한다. 동 제도는 배출권거래제와 유사한 실업률 타기팅 정책으로, 정부가 고용조정권 거래시장을 운영하고 고용창출목표를 정하여 고용조정권의 수요자로 참여하면서,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고용조정권의 발행·판매 권한을, 고용을 줄인 기업에는 고용조정권 구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기업의 고용 증감에 따라 금전적 유인 혹은 비용을 부과하되, 단위 보조금(조세)의 크기를 정부가 정하지 않고 노동시장 상황과 고용창출 목표를 반영하여 거래시장에서 고용조정권의 가격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상기 정책방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기존 정책에 비해 소요재정 대비 고용창출 효율성이 높다. 둘째, 재정투입과 정책효과 간의 시차 문제가 해소되며, 단위 보조금의 규모를 정할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용창출목표만 설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의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셋째, 기업 글로벌화에서 비롯되는 고용문제에 대응하는 이상적인 논리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본고의 정책방안이 실효성을 가진다면, 이는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예컨대 정책당국이 금리 조정을 통해 물가상승목표를 관리하듯이 고용조정권 거래제도를 통해 완전고용 실업률 타기팅을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총수요나 경제성장률보다 실업률 관리에 중점을 두는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은 효율성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형평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정책운용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연구책임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동향분석실)

수시 과제 연구

산업 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개발 중심의 개발의제가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개도국의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개발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산업 중심의 개발협력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산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가진다. 단, 개도국의 여건이나 수요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그대로 전수하거나 이의 답습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 분야 ODA에 대한 이해 제고에 기여하고 한국의 특수성과 파트너 국가의 수요가 반영된 효과적인 산업 분야 ODA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국제사회가 합의한 공통의 정의가 부재한 산업 분야 ODA의 개념과 범위 설정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

● 우리나라 산업 분야 ODA 유망 프로그램별 지원 적정성 판단 기준과 잠재 협력국 분류 결과

프로그램	협력 관계 및 가능성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협력국 내 여건	우선 지원 필요 협력국	신규 유망 협력국
	공통 기준	프로그램 별 기준			
① 지속가능한 전기 에너지 접근성 강화	교역량, ODA 규모	KSP 지원 경험, CPS 내 포함 여부	- 화석연료 의존도 - 에너지개발지수 - 인간개발지수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몽골,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②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개발			- 도시화 비율 - 인프라 구축 수준 - 클러스터 개발 정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몽골, 아제르바이잔, 가나
③ 중소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금융 지원			- 내수시장 규모 - 신규 등록 회사 수 - 중소기업 창업 및 운영 여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볼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④ 수출 활성화 정책 및 지원시스템(금융, 통관) 구축			- GDP 대비 산업 비중 - 수출입 절차 - 물류 성과 지수	-	아제르바이잔, 몽골,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표준산업분류 및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된 산업의 정의와 OECD DAC의 원조목적코드를 기본 분류법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경제인프라 분야의 정보통신과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생산 분야의 공업, 광물자원 및 광업, 건설,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관광을 산업 분야 ODA에 포함한다.

본 연구는 기수립된 정책문서들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산업 분야 ODA 비교우위 프로그램들을 파악하고 각 프로그램의 지원에 적절한 협력국을 도출하는 방향의 접근법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PS), 한국형 ODA 프로그램, 지식공유사업(KSP) 지원 사례, 협력국가들의 국가개발계획을 참조하여 선정된 총 네 개의 유망 산업 분야 ODA 프로그램은, ① 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 접근성 강화, ②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 개발, ③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금융지원, ④ 수출 활성화 정책 및 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의 지원 적절성 및 우리나라와의 협력정도를 고려한 BCG 매트릭스 기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별로 우선지원이 필요한 국가와 신규 유망 협력국을 유형화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CPS와 한국형 ODA 프로그램 등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ODA 전략들 간에 발생하는 산업 분야 지원정책의 간극은 이들의 수립 과정과 고려된 기준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CPS는 개도국의 수요와 함께 우리나라의 그간 지원 경험을 주로 반영하였고 한국형 ODA는 우리나라 지원역량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특히 생산 부문에서 간극이 두드러진다. 실제 파트너 국가들의 국가개발계획에서 생산 부문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향후 CPS 수립 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여타 정책들을 고려함으로써 우리의 지원경험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비교우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가 수행한 협력국 유형화는 유망 산업 분야 ODA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사업화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국가군에 대한 이해 제고를 도울 수 있다. 실질적인 적용단계에 있어 각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지원방안 구축 및 프로그램과 국가의 연결고리를 위한 지역연구가 요구된다.

▶ 연구책임자
임소영 부연구위원(국제개발협력실)

▶ 연구참여자
김계환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강지현 연구원(국제개발협력실)
윤정현 연구원(국제개발협력실)
민영진 연구원(국제개발협력실)

수시과제연구 보고서(2013)

제목	저자
가짜석유 유통량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전재완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 효과분석	김원규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김영수
녹색기후기금(GCF)의 모니터링 방법론 연구 : 결과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임소영
The Introduction of Social Service e-Vouchers and Changes of Market Structure in the Mother-Infant Help Service Market	조현승
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와 지역대학의 역할	최희선
배출권거래제 경매수입의 활용 방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분석	한기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과제	박정수
예비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 일본의 사례와 태양광(PV)+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중심으로	이두희
특허자료를 이용한 기술융합 측정 및 확산 트렌드 분석	최재영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 고용의 사회적 가치를 기업 고용결정에 내부화하기	강두용
산업 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 분석	임소영
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정책 전개방향	김화섭
Long-Term Projection for the Growth Pattern and Industrial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이진면
호텔산업 공급주기와 규제 연구	최현경
2014년 경제 · 산업 전망 :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강두용
게임시장의 규제가 산업생태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박문수
스포츠시장 신분류 작성 원리와 활용 방안 : 스포츠시장 가치망을 중심으로	김화섭
탈산업화와 제조업에 의한 서비스 아웃소싱 : 국제비교를 통한 분석	김계환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 기술정책 방향과 과제	홍지승
로봇산업의 R&D 투자성과 분석과 시사점	신윤성
한 · 중 영화산업 협력방안	최봉현
도제훈련제도의 국가별 특성 및 한국직업훈련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	최희선
국내 지식집약사업서비스업의 입지패턴과 정책 시사점	이동희
성장형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전략	박정수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해외진출 동향 및 시사점	남장근
경기변동과 구조조정 개선방안 : 취약산업의 재무구조 분석	하 준
경제적 교란의 산업간 파급 구조	황선웅
고령화시대 항노화산업의 부상과 성장전략	문혜선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허문구

KIET 주요 칼럼 (2013)

순번	주제	집필자	언론사	날짜
1	무상버스 달콤함에 숨겨진 독(毒)	김천근	서울경제	4.17
2	부품소재를 중국 내수에 접목시키려면	이문형	이데일리	4.4
3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고동수	서울신문	4.2
4	'방산 한국'의 필요조건	안영수	서울경제	4.1
5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살 길	김숙경	서울경제	3.20
6	창조경제와 미래 먹거리	서동혁	서울경제	2.27
7	진입규제, 그들만의 리그	고동수	서울신문	2.27
8	창조경제와 자동차산업	조 철	그린경제	2.19
9	선진 한국의 조건	윤우진	서울경제	2.10
10	중산층을 살리려면	윤우진	파이낸셜	2.5
11	창조경제와 힘 있는 사람	고동수	서울신문	1.22
12	문화산업이 미래다	최봉현	국민일보	1.7
13	부품소재, 엔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서동혁	동아일보	1.7
14	이제는 한국형 제조업 발전모델을	서동혁	전자신문	1.2
15	이제는 서비스수출이다	최봉현	서울경제	12.18
16	제조업의 희망 창의인재	김영수	서울경제	12.3
17	외국인 투자 유치도 못 하게 막는 국회	장윤중	조선일보	11.29
18	모두가 싫어하는 전기요금 인상(?)	고동수	헤럴드경제	11.19
19	창조경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재홍	서울경제	11.11
20	인구 조로(早老) 파고 넘으려면	허문구	서울경제	11.6
21	메이저리그서 창조경제를 본다	김화섭	매일경제	9.7
22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 키운다	최봉현	공감코리아	7.17
23	신성장동력 창출과 비교우위	오영석	서울신문	6.13
24	입국장 면세점 도입해야	최봉현	국민일보	5.21
25	창조경제와 차별화 경쟁력	오영석	서울신문	5.11
26	가본 적 없는 길 찾아야 창조경제 구현된다	심영섭	중앙일보	4.11
27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전략	오영석	서울신문	3.25
28	21세기는 산업 · 통상 융합시대	심영섭	중앙일보	2.4



朝鮮日報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A31면 오피니언

외국인 투자 유치도 못 하게 막는 국회

기고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기쁘긴 하지만 그 기세가 강해 보이지 않는다. 설비투자 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2조원의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나서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일본 기업들과 합작하여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건이다. 문제는 양사가 손자회사라는 데서 시작된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는 각각 지주회사인 SK㈜와 GS의 손자회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100%의 지분을 보유해야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합작회사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조원대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5월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

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변한 건 없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 피곤하고 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2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공장 설립에 2만명 가까운 일자리가 늘어난다. 공장 짓는 건설인력만 일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해보면 플랜트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업 인력이 7000여명, 설계 등 전문 서비스업에서 17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호황 때 2만명과 지금의 2만명은 천양지차다.

위기 국면으로 접어드는 석유화학 산업도 기사회생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지금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다. 중동기업의 에탄가스 기반 저가 제품의 물량 공세, 중국의 자급률 제고 가속화,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 석유화학 제품의 대량 수출 압박 등 감당하기 어려운 '삼각파도' 속으로 빨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최근 합성섬유

와 페트병의 원료인 TPA(테레프탈산)를 자급화하면서 2011년 37억달러였던 대중 수출은 작년 29억달러, 금년 10월까지 16억달러로 추락했다. SK와 GS 두 기업이 PX(파라자일렌) 공장을 지으려는 이유는 PX가 TPA의 원료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TPA 자급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원료인 PX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단, 외투 합작이 불가피한 이유는 일본 기업이 PX 원료의 공급처이기 때문이다.

산업은 생물이고 기세다. 중국이 자급화에 박차를 가할 때 우리가 한 단계 앞서 나가지 못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머뭇거리다가는 중국에 따라잡히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추격을 막고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법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없으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경우 경제력 집중 문제를 둘러싸고 '된다' '안 된다' 논쟁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중국이 치받고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이즈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간다면 한국 산업의 앞길은 험난해질 것이다. 여의도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려본다.

수탁과제 연구

“본원은 수탁과제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 2013년 수행 수탁과제 연구보고서 : 115종

창조경제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에 관한 연구

4 수탁과제 연구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영역

1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

국가의 성장 잠재력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한계 극복을 위해 창의성과 융합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구체적 실천전략으로서, 현 시점에서 2020년 전후의 기간 이내에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선정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제는 창조적인 산업 마인드를 토대로 산업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하는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재도약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교우위 역량 토대 위에서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창의융합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도출과정 및 결과

창의융합 제조업 분야에서는 주력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장에 기여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0개 국가전략기술과 민간, 정부의 각종 보고서에서 언급된 유망미래 기술 및 산업 중에서 창의융합분야 대상산업군에 해당하는 후보기술 31개와 분과위원 및 경제단체 등에서 제안한 후보 등 총 47개를 1차 후보군으로 도출하였다.

이 1차 후보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후보군을 선정하였다.

성장동력 선정기준으로는 ① 창조적 산업생태계 조성, ② 성장 잠재력, ③ 경쟁우위, ④ 파급효과 등 네 가지를 적용하였다. 이는 다른 분과들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종합평가 결과, 창의융합분과에서는 최종 후보군으로 다음 6개 분야를 제시하였다. ①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연계된 스마트 카, ② 심해저 자원확보를 위한 Subsea 해양플랜트, ③ 차세대 스마트 제품용 SW-반도체 통합디바이스, ④ 탈석유자원 활용을 위한 신화학산업, ⑤ 스마트 팜(Farm), ⑥ 비활용 희유 금속 자원화를 위한 신금속산업 등이다. 아울러, 종합평가 결과 높은 순위에 있었지만 산업중복 문제의 해소와 타 분과로의 후보 이양 등을 이유로 '저탄소 시대에 대응하는 Eco Mobility', '친환경 시대를 선도하는 초대형 선박',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분야는 최종단계에서 제외되었다.

3 미래성장동력 최종후보군 및 산업적 특징

창의융합분과에서 최종 선정된 6개의 미래성장동력 후보는 3개의 기반산업과 3개의 전략산업으로 분류된다. 전략산업으로는 기존 주력산업에 세계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주도적 위치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스마트카, Subsea 해양플랜트, 스마트 팜이 해당된다. 기반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SW융합 반도체, 신금속산업, 그리고 포스트 석유화학이다.

스마트 카는 상용화 가능한 자율주행시스템을 포함한 스마트자동차, 지능형교통 시스템, IT기반 Smart High Way 등과 연계/융합 생태계 구축을 통해 주력산업의 고도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 Subsea 해양플랜트는 심해 해저에서 오일과 가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조선해양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기구축된 산업생태계의 확장성이 기대된다. 스마트 팜은 전략적 관점에서 도출된 성장동력 후보 성격을 지닌다. 농식품 산업에 ICT·BT·ET 등 융합 기술을 통해 자동화·로봇화로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SW-반도체 융합 디바이스는 기존 반도체 디바이스에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SW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구현하는 융합부품으로서, 각종 기기들의 스마트화를 가능케 하여 토털 솔루션 및 창조적 서비스들을 다양한 분야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금속산업은 절대량이 풍부하지만 이용기술이 없는 비활용 희유금속이 함유된 無가치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원화 사업이다. 신자원을 이용한 희유소재의 종합적인 공급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탄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석유화학은 기존의 석유(천연가스 포함) 대신 대체자원인 석탄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석유화학산업을 구현하는 기술 및 공정이다. 다양한 화학소재·원료 및 수송용 연료를 제조하고 다른 산업에도 활용 가능하다.

▶ 연구책임자

서동혁 선임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실)

나노융합산업의 지역별 특화발전과 입지수요 연구

4 수탁과제 연구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용역

1 나노융합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의 특성상 여타 분야와의 융합이 용이한 확장성을 갖고 있으며, 산업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다. 2015년경 세계 나노시장 규모는 1조 달러(NSF 추정)에서 연평균 18% 수준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2조 6,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ux Research).

"2012 나노융합산업조사(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나노융합제품의 매출액은 2011년에 92조 2,854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나노전자가 85.1%로 가장 크고, 나노소재 12.1%, 나노장비·기기 2.5%, 나노바이오·의료 2,934억원 순이다.

2 나노융합산업의 지역별 특화 방향 및 입지수요 분석

"2012 나노융합산업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나노융합기업은 수도권에 245개(52.4%), 충청권에 102개(21.8%)가 입지하고 있으며, 대경권(11.5%), 동남권(6.4%), 호남권(5.1%), 강원권(2.8%) 순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 편중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나노융합 R&D역량을 구비한 대전, 나노융합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해온 경남 밀양,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춘천과 철원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별 분석을 추진하였다.

우선 지역별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분석은 노동력, 연구학술기능, 교통여건, 도시인프라, 용지조건, 연관산업의 집적과 나노 특화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어떤 여건에 놓여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별 나노융합산업의 발전 비전과 특화분야를 지역별 나노융합산업의 특화 분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지자체의 육성 의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지역별 나노융합산업 단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적정 산업단지 규모, 입주 시 우선순위, 입주형태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진하였다.

3 지역별 나노융합산업의 활성화 방안

나노융합산업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나노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다. 이를 위해 지식과 아이디어의 주요 생산주체인 대학, 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 개발지원을 강화하고 여기서 생산된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며, 나노분야의 R&D 성과를 기반으로 전 주기적 나노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R&BD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국내의 기술공급자로부터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나노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나노전문기업의 기술과 제품 정보를 정기적으로 잠재적 수요기업에 제공하여, 나노기술의 채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노융합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나노전문기업은 기술적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 초기단계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 마케팅과 해외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세계 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는 우수 나노융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취약한 해외 마케팅 역량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나노융합 제품별로 목표시장을 정하는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비전에 의하여 2020년에 나노융합산업 매출 2,500억 달러 달성, 나노융합기업 2,000개 이상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나노제품의 생산과 나노기업의 집적을 위한 전용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나노융합산업단지는 나노인프라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되 사업화가 가능한 R&D성과 및 지역 내 입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성 규모를 차등화한다.

▶ 연구책임자
정은미 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실)

▶ 연구참여자
홍진기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송우경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이고은 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실)

주요 수탁과제 보고서(2013)

과제명	발주처	책임자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영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최봉현
복수국간서비스협정 문화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고준성
중국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협력 방향 연구	지식경제부	이문형
저탄소 정책변수와 자동차 가격탄력성 상관성 분석 연구	환경부	전재완
표준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기술표준원	최현경
GCC 산업 다각화와 한국의 협력 국제 세미나	산업통상자원부	주동주
2013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페루 정책자문	한국개발연구원	허병기
LPG하이브리드 택시 도입 타당성 연구	환경부	전재완
FTA 활용전략수립과 수출유망품목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김수동
국제투자·정책 동향 및 국제투자유형별 ISD 제기 현황 분석과 그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성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이행계획 정책연구용역	통일부	이석기
외국인투자유치 경제특구 내실화 연구 용역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재곤
과학벨트 비즈니스 환경구축 종합대책 수립 기획연구	미래창조과학부	김영수
녹색기후기금 사업모델 운영방안 연구	기획재정부/환경부	임소영
디자인 등을 활용한 생활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이임자
한·중·일 FTA 상품양허 추진방향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이진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미래창조과학부	김홍석
제조+서비스 융합 확산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정책과제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김홍석
나노융합산업의 지역별 특화발전과 입지수요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정은미
폐광지역의 산업진흥 및 소득증대방안 연구용역	강원도청	홍진기
한중 FTA 상품 양허 협상 대응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이진면
창업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양현봉
최근 조선불황 이후 세계(한중일 등) 구조재편과 정책방향 및 향후 시장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홍성인
서비스 KS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산업분류에 관한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박정수
미래 일자리 창출형 산업발전 전략과 정책방향 연구	기획재정부	장석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국무총리실	조영삼
경제자유구역 산업특화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박재곤
중국-대만 양안관계 분석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석기
TPP 추진에 대한 대국민 여론(언론)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수동

II

연구관련
활동

1. 세미나
2. 국가정책 현안과제 연구
3. 정기간행물 발간

인도네시아
산업개발 파트너십
합동 워크숍

2013.8.19-23

산업연구원 대회의실

The First Joint Workshop on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onesia

주최 : 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CMEA), 인도네시아 그린개발위원회 (MOLINA)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프로그램

- ▶ Opening Session :
 - 개회사 :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 기조연설 : Mr. Eddy Satriya 인도네시아 대표단 단장

▶ 제1세션 : Industries Session

- Presentation 1 : Indonesia-Korea Cooperation in the ICT Industry
- Presentation 2 : Cooperation Strategies in the Green Industry Sector between Indonesia and Korea
- Presentation 3 : Korea-Indonesia Industrial Cooperation: Automotive Industry
- Presentation 4 : Indonesia ICT Prospect and Opportunity
- Presentation 5 : Green Industry
- Presentation 6 : Strengthening Automobile Industry

▶ 제2세션 : Policies Session

- Presentation 1 :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Proposal for Indonesia
- Presentation 2 : Korean Experience of SME and Cooperation Field
- Presentation 3 : Economic Outlook and Strategy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 Presentation 4 : Promoting Indonesia SME's

▶ 제3세션 : Green Car Session

- Presentation 1 : Status of Progressing Indonesia EV Roadmap & Strategy to Establish R&D Institute in Indonesia
- Presentation 2 : Strategic Analysis of EV Industry for Developing EV Roadmap in Indonesia
- Presentation 3 : Toward the Establishment of Indonesian Automo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INARD), in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 Presentation 4 : Modeling of Bidirectional DC Fast Charging Infrastructure



한중 서비스산업 투자협력 방안

주최 : 산업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 프로그램 :
- 개회사 :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 인사말 : 史丹 재경전략연구원 부원장
 - 축사 :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 제1세션 : 한중 서비스산업 투자협력 방안

- 사회 : 김현수 교수 (국민대)
- 발표1 : 중한 서비스무역 국제경쟁력 대비 분석: 桃战琪 박사 (NAES)
- 발표2 : 중국의 서비스산업 진흥과 한중 협력방안: 박정수 박사 (KIET)
- 패널토론 : 史丹 박사 (NAES), 양평섭 박사 (KIEP)

▶ 제2세션 : 업종별 한중 투자협력 방안

- 사회 : 광재원 교수 (한양대)
- 발표1 : 한국 통신발전에서 정부 역할 - 중국 통신전략에의 시사점: 冯水晟 박사 (NAES)
- 발표2 : 한중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조현승 박사 (KIET)
- 발표3 : 중한 에너지절약산업의 발전비교 및 협력 전망: 张颖熙 박사 (NAES)
- 발표4 : 한중 물류 협력 현황과 과제: 김천곤 박사 (KIET)
- 패널토론 : 史丹 박사 (NAES), 夏杰长 박사 (NAES), 한기주 박사 (KIET), 이은호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KIET-NAES
공동 국제세미나

2013.10.07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KIET 한-러 국제
세미나

2013.10.29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

러시아의 극동 및 북극권 개발 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주최 : 산업연구원

프로그램 : • 개최사 :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 축사 :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 제1세션 :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계획과 한-러 협력 방향
- 발표1 : 극동-시베리아 개발 전망과 주변국과의 협력 방향: Liudmila V. Popova 교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 발표2 : 극동 러시아의 개발 과제 및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평가: Artem L. Lukin 교수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 발표3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남-북-러 3각 협력 방향: Tagir D. Khuziyatov 교수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 발표4 :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에 따른 한국의 대극동 협력 방향: 김학기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 토론 : 김리원 수석연구원 (POSCO 경영연구소), 이대식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나희승 책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경환 부장 (중앙일보 정치국제부)

- ▶ 제2세션 : 러시아의 북극권 개발 계획과 한-러 협력 방향
- 발표1 : 러시아의 북극권 개발과 아-태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 Nikita A. Lomagin & Sergei P. Sutyryn 교수(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 발표2 : 러시아의 아쿠티아 북극권 개발 현황과 한-러 협력 전망: Oleg G. Sidorov 교수 (러시아 아쿠츠크 북동연방대학교)
- 발표3 : 러시아의 북극정책과 동아시아 국제 관계-새로운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김석환 소장(한국유라시아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 발표4 : 러시아 북극권 개발과 한국의 협력 방안: 김계환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 토론 : 황진희 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시장분석센터), 박병인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부형 수석연구원 (현대사회경제연구원)



개도국 산업협력 증진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주최 : 산업연구원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프로그램 : • 개최사 :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 축사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 기조연설 : 왜 국가는 중진국함에 빠지는가 : 기술수명주기와 산업선별의 역할: 이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 제1세션 : 남미 및 아프리카국가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정책
- 사회 : 김원호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발표1 : 브라질의 중화학공업화 추진 : 성공인가 실패인가?: Dr. Mauricio Canedo Pinheiro 연구원 (브라질 FGV(Fundacao Getulio Vargas))
- 발표2 : 알제리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김계환 박사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 토론 : 김영환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시장정책과), 황기상 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흥시장팀), 이장혁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 제2세션 : 아시아국가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정책
- 사회 : 강성진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발표1 : 대만의 중화학공업화 정책경험: CHEN Tsung Yun 부연구원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Taiwan)
- 발표2 : 필리핀의 중화학공업화 수수께끼: Ma Joy V. Abrenica 교수 (Univ. of the Philippines Diliman)
- 발표3 :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성과: 오영석 박사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 토론 : 박현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최성호 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임성주 차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영관리팀)



2013.10.31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

2013.12.18

산업연구원 대회의실

GCC 산업 다각화와 한국의 협력 세미나

주최 : 산업연구원(KIET), 걸프산업자문기구(GOIC),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MOTIE)

프로그램 : • 개회사 :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 환영사 : 정철용 대사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 축사 : H.E. Mohamed Alharthy 대사 (주한 오만 대사관)

▶ 기초연설 : GCC 산업분야의 현재와 미래: Abdul Aziz Al-Ageel 박사 (GOIC 사무총장)

▶ 제1세션 : 한-GCC 산업협력: 전통산업 분야

사회 : 주동주 실장 (산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실)

발표1 : 한-GCC 경제협력과 미래 발전방안: 에너지, 플랜트 산업을 중심으로: 신윤성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

발표2 : GCC의 외국인 투자, 도전과 기회: Basel Shadid 박사 (GOIC 산업투자국 국장)

패널토론 : 정경희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과장),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동팀 팀장)

▶ 제2세션 : 한-GCC 산업협력: 신산업 분야

사회 : 이수택 대표 (UNIDO 서울투자진흥사무소)

발표1 : 보건 · 의료분야 한-GCC 산업협력: 최윤희 실장 (산업연구원 미래협력실)

발표2 : GCC의 ICT 에코시스템 정립: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상원 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장)

발표3 : GCC 국가들의 지식기반 산업 전망: Laila Diab Shrair 박사 (GOIC 전략기획컨설턴트)

패널토론 : 박용철 과장 (외교부 중동2과), Sherif Heikal 부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주최 : 산업연구원, (사)한국규제학회

프로그램

▶ 제1세션 : 창조경제와 규제개혁 방향

사회 : 이성우 (한성대)

발표1 : 새정부의 산업보안 규제정책의 방향-정부와 기업 간 관계와 효과적 규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임창욱 (충남대), 박형준 (성균관대)

토론 : 김진국 (배재대)

발표2 : 스마트규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이상규 (산업연구원)

토론 : 김주찬 (광운대)

발표3 : 강제적 섯다운제가 온라인 게임이용 시간을 줄였는가?: 박문수 (산업연구원), 고대영 (산업연구원), 박정수 (산업연구원)

토론 : 최진욱 (고려대)

▶ 제2세션 : 창조산업과 위험 · 안전 규제1

사회 : 최병선 (서울대)

발표1 : 위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시론적 연구-식품안전 분야에의 적용: 이해영 (광운대)

토론 : 이주선 (SK경영경제연구소)

발표2 :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법 분류체계 합리화 방안: 이영주 (서울시립대)

토론 : 최현경 (산업연구원)

▶ 제3세션 : 창조산업과 위험 · 안전 규제2

사회 : 김병배 (김앤장)

발표1 : 건축/소방 화재안전기준의 상충구도 개선방안: 박재성 (송실사이버대)

토론 : 이민창 (조선대)

발표2 : 원자력 화재방호 규제의 발전방안: 송우승 (서울시립대)

토론 : 윤명오 (서울시립대)



공동학술대회

2013.11.12

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층 스프루스룸

국제세미나 및 정책세미나

주요 실적(2013)

국제세미나

주제	개최일자
한중 서비스산업 투자협력 방안	2013.10.7
러시아의 극동 및 북극권 개발 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2013.10.29
개도국 산업협력 증진모델 정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2013.10.31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2013.11.12
GCC 산업 다각화와 한국의 협력 세미나	2013.12.18

정책세미나

주제	개최일자
창조경제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2013.4.16
창조경제와 한국 자동차산업의 진로	2013.5.30
민군기술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발전방안	2013.8.12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2013.9.2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복합 섬유 발전전략	2013.11.14
창조경제 시대, 방산 Hidden Champion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2013.12.6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2013.12.9

국가정책 현안과제 연구

요청 현안이슈의 정책대안(대정부지원과제) 제시

본원은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이 수시로 요청하는 현안과제의 정책대안을 연구·제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28건의 현안과제 분석 정책대안을 국가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국가기관 요청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주요 사례(2013)

요청 기관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조업 주요업종의 국내투자 현황 및 전망
국회	엔저 충격과 영향 및 대응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실현계획 제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선진 미래 창조를 위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주요 발전과제
청와대	신산업부문의 규제개선 정책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출구전략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와 한국무역의 방향
기획재정부	최근 업종별 투자동향과 정책제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간 융합효과 측정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국제경쟁력패턴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지식경제부	여성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정책과제
기획재정부	소수기업 경제력집중에 따른 우리경제 취약요인 점검
중소기업청	상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제정안 검토의견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방안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지역 R&D 투자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중견기업의 고용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산업의 창조경제 방향
청와대	바이오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의료관광산업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최근고용구조와 제조업 및 기계부문의 고용실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조선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대책
산업통상자원부	민군협력 및 방위산업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청와대	전력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 제도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니 산업협력 현황과 비전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철강산업 대응전략
통일부	김정은 경제체제의 특징 및 전망
청와대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기획재정부	시나리오별 대 이란제재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환경부 유엔기후변화협상 대비 재정분야 의제분석

3

정기간행물 발간



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이다.

● 주요 수록 논문 (2013)

제목	저자	수록 연월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오영석	2013. 1
제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박 훈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박정수	
중소기업 고용 변화의 세 가지 논점과 정책적 시사점	조덕희	
지역산업의 고용 동향과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김영수	
세일가스가 에너지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윤성	
유통산업의 구조변화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김숙경	
기업의 R&D 아웃소싱 현황 및 시사점	박문수	
2013년 분수령에 선 DDA 협상, 날개 달 수 있을까?	이승우	
해외산업 이슈점검	유정근 외	
새 정부에 바라는 신산업정책 방향	황인학	2013. 2
10대 주력산업의 2013년 전망과 주요 정책 이슈	이경숙 외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와 강소기업 육성방안	이영주	
반도체산업의 공급구조 급변과 발전과제	주대영	
북한 외화통용 실태와 시사점	이석기 외	
한·중 가공무역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김바우 외	
미래를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 : 지식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구현하자	이상훈	
해외산업 이슈점검	김수동 외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임충식	

제목	저자	수록 연월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강두용 외	2013. 3
수출과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	신현수	
주요 산업별 영향	이경숙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결정요인 및 시사점	홍지승 외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제조업을 중심으로	김동수 외	
2000년대 이후 한국 지역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송우경	
해외산업 이슈점검	김수동 외	
산업통상과 New ASEAN Way	김창규	
급증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오혁중	
창조경제론의 성장 패러다임 구조와 정책 보완과제	장윤종	
디지털TV산업의 지속성장조건과 과제	이경숙	2013. 4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강두용	
새로운 성장원천으로서 지식기반 자본의 역할 : OECD 논의를 중심으로	노영진	
신정부의 출범과 한·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사공목	
해외산업 이슈점검	김수동 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의산업화 추진과제	김학도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신정부 정책방향	성창훈	
ICT 융·복합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언	박철우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이진면 외	
저비용항공사 현황과 진입규제완화 효과	최현경	
무역협정의 성격에 따른 수출효과와 시사점	김재덕	2013. 5
중국의 신행도시화 정책과 시사점	김화섭	
해외산업 이슈점검	김수동 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	지광철	
중소·중견기업이 이끄는 신무역정책 방향	임형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정책 방향	정인교	
유턴(U-turn)기업 지원 방안	이항구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정민 외	
중국 콘텐츠산업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박지혜	
독일 화학산업의 경쟁력 원천과 시사점	남장근 외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우리의 대응 :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국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김학기	2013. 6
해외산업 이슈점검	김수동 외	
아세안, 상생형 통상협력의 좋은 동반자	양기욱	
한-베트남 사례로 본 신흥국 산업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최병욱	

3 정기간행물 발간

제목	저자	수록 연월
2013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강두용 외	2013. 7
2013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서동혁 외	
조선해양산업의 창조경제 방향과 과제	홍성인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성과와 과제	양현봉	
방산제품 수출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지일용 외	
2013년 프리아구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김재진 외	
아베노믹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사공목	
해외산업 이슈점검	김수동 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정대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과제	이세준	
한·중 정상회담과 산업협력	조철 외	2013. 8
국내 중소 조선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대책	홍성인 외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윤지영	
일자리창출 상위 10% 기업의 특성 분석	김정홍	
전문엔젤과 엔젤그룹 육성 방안 : 샌디에이고 엔젤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태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향	이은호	
한·중 무역의 두 가지 특징과 한·중 FTA	정환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제조업 전략	장윤중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	박정수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화와 정책적 시사점	최봉현	
베트남 전자산업 현황과 협력 방안	이경숙	2013. 9
중국 가공무역제도의 개선 의미와 시사점 : 전창(轉廠)제도 간소화와 산자이(山寨)의 비교	김화섭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 특성과 정책 과제	홍석일	
'산업단지 활력지수' 산출을 통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허문구 외	
해외산업 이슈점검	김수동 외	
고급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김학도	
창조경제시대 프랜차이즈의 역할	박주영	
기업조사를 통해 본 제조업체 경기 전망	동향분석실	
주력업종별 경기 동향	성장동력산업연구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 추이 분석	노영진	
한·중·일 철강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김주한	2013. 10
수송부문 에너지 혁신을 위한 그린 카 보급 방안	이항구	

제목	저자	수록 연월
일본 화학산업 경쟁력의 재조명과 시사점	심우석 외	2013. 10
필리핀 조선산업과 한국 조선산업의 비교	최용준	
해외산업 이슈점검	우석균 외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전략	유정열	
세계 성장 엔진으로 되돌아오는 선진국 경제	김선화	
신흥국의 산업동향과 우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	조철	
신흥국의 ICT시장 동향과 진출방안	이경숙	
섬유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이임자	
특허박스(Patent Box)제도의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	최현경 외	
창의계층의 산업별·지역별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김영수	
국내 기업의 경영성과 분석과 정책 대응방안	최현경 외	2013. 11
해외산업 이슈점검	김수동 외	
디자인 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 고부가가치화	이귀현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정책	동학림	
2014년 거시경제 전망	동향분석실	
2014년 산업 전망	김종기 외	
주요국의 플랜트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 해양 및 극지설비를 중심으로	박광순	
창조경제의 과거, 현재와 미래	윤우진	
해외산업 이슈점검	우석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	박일준	
창조경제와 소프트웨어	김진형	2013. 12

월간 KIET 산업경제 논문

▶ 김정홍 연구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일자리 창출 상위 10% 기업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일자리 창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젤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워, 어떤 속성을 가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지 분석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DB에 의한 가젤기업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상위 10%에 속한 가젤기업의 경우 2007년 평균 191명 정도의 중소기업이 2012년 371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반면, 비가젤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56명에서 52명으로 기업당 4명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수도권 소재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연평균 4.5%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연평균 3.1% 증가에 그쳤다.

둘째, 전체 기업 대비 가젤기업의 기업체 수 비중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 1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지식기반제조업 11.8%, 주력기간제조업 8.6% 순이었다. 세부 업종별 가젤기업 수 분포를 보면, 정보서비스, 전자·정보기기, 기계·자동차 등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 분포하였다. 따라서 가젤기업은 양과 질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역별로는 서울, 대전, 울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 가젤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서울과 대전은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울산은 주력기간제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광주는 이 두 가지 산업이 고루 분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의 가젤기업 비중은 전체 기업 수 비중(54%)보다 훨씬 높아(60%) 일자리 창출이 기업 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입지여건에도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쌍궤(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창조산업이므로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다양한 유형의 창조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생산적복지/국민행복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산업·경제 동향과 이슈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고자 발간하는 영문 산업경제동향지이다.

● 주요 수록 내용 (2013)

제목	저자	수록 연월
Economic and Industrial Outlook for 2013	민성환	
Innovation in the Service Sector : Performance and Policies	박정수	2013, 1/2
Recent Trends of Corporate Investment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노영진	
The Effects of Trade Agreements on Trade : Asymmetric Partners and Types of Agreements	김재덕	
Changes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and Job Creation Strategies for Korea	오영석	
Korea's Support Measures for Small Company's Environmental Facility : Future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곽대중	2013, 3/4
Recent Trends of Corporate Investment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장원준 외	
China's Processing Trade : Trends and Implications	김바우 외	
Employment Structure and Job Creation Strategy in Service Industries	김천근	
What Factors Lead Korean SMEs to Become Global Hidden Champions?	이영주	2013, 5/6
Policy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irline Industry	이상규 외	
Bilateral Cooperation in IT and IT-enabled Services between India and Korea in the Post-CEPA Era : Potential and Challenges	Priyadarshi Dash	
Economic and Industrial Outlook for the Second Half of 2013	황선웅	
The Ri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hanges in Consumption Patterns	이영호 외	
Industry-University Cooperative Education for Regional Job Creation : Focusing on the LINC Project	최희선	2013, 7/8
Korea-Japan Industrial Cooperation under the Park and Abe Administrations : Prospects and Proposals	사공목	
Promoting Emerging Industries under the Creative Economy in Korea	이상규	
Regional Industry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Direction of Job Creation Policy in Korea	김영수	
An Analysis of the Interdependence between Goods and Service Sectors Us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Matrix Multiplier Model	이건우	2013, 9/10
China's New Urbanization and Its Implications	김화섭 외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Korean SMBs and their Implications	홍지승	
Emerging Business Models in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for the Creative Economy	곽대중	2013, 11/12
The Effects of the U.S. and the EU'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Korean Exports	김수동	
Export Dynamism of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윤우진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논문

▶ 이근우 선임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실)

An Analysis of the Interdependence between Goods and Service Sectors Us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Matrix Multiplier Model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Sep./Oct. 2013)

본 연구에서는 역행렬계수 요인분해 모델을 이용하여 생산과급효과를 재화부문과 서비스부문 내 자체활동에 의한 과급효과와 이들 양 부문 간 상호과급효과로 나누어 계측하고, 서비스경제화의 흐름 속에서 각 부문의 활동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재화부문의 서비스 투입유발계수는 평균적으로 볼 때 1995~2009년의 분석기간 중 2005년을 제외하면 실질기준으로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재화부문이 서비스 활동을 유발하는 정도는 분석기간 중 대체로 확대되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부문의 재화부문 내부생산유발계수의 평균치는 분석기간 전체로 볼 때 실질기준으로 약간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셋째, 서비스부문 내부의 과급효과를 의미하는 서비스부문의 내부승수는 평균적으로 볼 때 분석기간 중 일관되게 증가하였다. 이는 서비스부문 내부에서의 산업 간 과급효과, 즉 자기증식효과를 통한 서비스경제화가 꾸준히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재화부문을 경유하여 서비스부문에 되돌아오는 생산과급효과를 의미하는 서비스부문의 외부승수는 평균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비스→재화→서비스의 과급 경로를 통한 서비스경제화의 진전도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재화부문의 서비스 투입유발계수와 서비스부문의 재화부문 내부생산유발계수의 크기를 비교 해본 결과, 후자가 전자보다 평균적으로 약 25%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화부문과 서비스부문 간의 상호의존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재화부문이 서비스부문에 주는 과급효과보다 서비스부문이 재화부문에 주는 과급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5~2009년 중 후자의 상승률이 -0.7%를 기록한 데 비해 전자의 상승률이 4.7%를 기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양 계수 간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재화부문의 서비스 투입유발계수와 서비스부문 내부승수를 비교해본 결과, 후자의 증가율이 전자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서비스부문은 재화부문 활동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경제의 서비스화는 재화부문보다는 서비스부문 내부에서의 자기증식적인 생산활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KIET 산업동향브리프

세계경제 동향과 국내 산업별 동향을 매월 생동감 있게 브리핑한다.
국내의 실물경제 동향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동향을 제공한다.

● 주요 수록 내용 (2013)

제목	저자	수록 연월
한국 반도체산업,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가 메모리를 추월	주대영	2013. 1
외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의 관광산업 정책방향	이동희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양극화 문제와 원인	강두용	2013. 2
2012년 한국 식품산업, FTA 효과 등으로 수출 선전	이준	
서비스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기대효과	구진경	
엔저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신현수	2013. 3
엔저가 주력산업 업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경숙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소비자 선택권 강화	조현승	
석유화학 업계, 해외진출 러시	남장근	2013. 4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의 빠른 성장과 시사점	김숙경	
장기 환율 추이로 본 엔저	강두용	2013. 5
1인 가구 증가와 가계소비	한정민	
5월 1일 한·터키 FTA 발효로 섬유 수출 확대 기대	이임자	
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의 키워드: 협동과 공유	김천곤	2013. 6
2013년 프로야구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추정	김재진	
조선산업 수출, 하반기 회복 전망	홍성인	
전력난 극복에 LED조명이 대세	주대영	2013. 7
중국의 콘텐츠시장 규제에 대비한 진출방안 모색 필요	박지혜	
2013년 국내경제 전망	민성환	2013. 8
10대 주력산업의 2013년 하반기 전망	김중기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금조달 환경 개선 필요	이순학	
수입차의 공세로 본격화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	김경유	2013. 9
사회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조현승	
중국의 성장둔화와 국내 실물경제 영향 및 대응	민성환	2013. 10
UHD TV와 OLED TV 간 차세대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이경숙	
엔지니어링서비스(Engineering Service) 산업의 유망성	이상현	
제조업 경기 동향과 회복 전망 : 기업조사 결과	민성환	2013. 11
굴삭기 업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조은정	
경쟁관계를 넘어 협력이 필요한 한·중 물류산업	김천곤	2013. 12
국내 반도체 업계 동향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투자 배경	주대영	
저작권 보호의식 개선으로 불법복제 감소 추세	최봉현	
2014년 국내경제 전망	이상호	2013. 12
10대 주력산업의 2014년 전망	김중기	
쇼루밍 현상, 온라인 시장의 성장 촉진	김숙경	

3 정기간행물 발간

계간 지역경제

지역경제에 관한 새로운 이론 개발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는 지역경제 전문 계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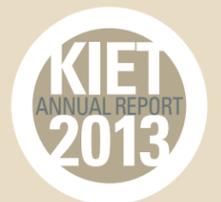
● 주요 수록 내용 (2013)

제목	저자	수록 연월
국정과제로 살펴본 박근혜정부 지역정책	박철우	2013. 3
엔저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윤성	
2012년 4/4분기 중 지역경제동향	박도연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이민화	2013. 6
창조경제시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송미령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송우경	
2013년 1/4분기 중 지역경제동향	박형진	
경기변동과 지역 간 경제적 격차	정준호	2013. 9
도시권의 산업발전 추이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김영수	
2013년 2/4분기 중 지역경제동향	박형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 현황과 대책	배인명	2013. 12
지역경제개발과 대학	정정목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분포 및 정책 방향	변창욱	
2013년 3/4분기 중 지역경제동향	박형진	

Ⅲ

연구성과 보급·확산 및 지식자산 개방 확대

1.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2. 산업정보 DB 업그레이드
 - 산업통계분석시스템 (ISTANS)
 - KIET 해외산업정보
 - 서비스통계포털
 - 방위산업통계 DB



1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콘텐츠 활용기능 제공

- NS(Facebook, Twitter) 스크랩 기능 추가
- KIET 산업경제 e-book 서비스 제공

모바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이메일 서비스 확충

- 모바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연구보고서 > e-KIET 산업경제정보, KIET 산업경제 추가

연구성과물 온라인 서비스 확충

- 2013년 연구성과물 및 전문자료 서비스 제공 실적

DB명	서비스내용	2012년 실적	2013년 실적	증가율(%)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정간물, 동향분석 등	13,116건	17,810건	35.8
전자도서관	아카이브 등	20,468건	21,942건	7.2
산업통계분석, 해외산업정보, 서비스통계포털	산업통계분석, 해외산업정보, 서비스통계	61,488건	66,984건	8.9
계	-	95,071건	106,707건	12.0

다양한 고객의견 피드백 시스템 운영

- 홈페이지 모니터링 요원 제도 시행과 분기별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 홈페이지 개선에 노력
- 2013년에도 8년 연속 예산을 투입하여 50명의 홈페이지 고객모니터링 단 제도 운영
- 분기별로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설문응답자 연간 400명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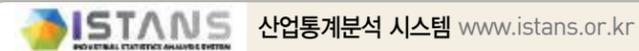
2

산업정보 DB 업그레이드

“지식자산 전파자(knowledge diffuser)의 역할 수행”

“본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성과물의 이용·확산 노력 외에도 정부, 기업, 학계, 일반인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산업정보 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산업통계 포털사이트”



“목표 : 산업통계의 허브(Hub)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사이트
- 국내외 산업통계를 온라인상에서 검색·분석하는 기능과 다양한 산업분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로서의 기능 수행
- 글로벌화, 융합화 등 최근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수요변화를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산업통계정보 지속 제공
- 산업정책 수립과 산업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산업통계정보 종합 사이트, ISTANS Portal”

- ISTANS Portal :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산업통계 종합 포털
- 30개 제조업, 20개 서비스업을 14대 핵심 주제 분류·체계에 맞추어 주제별·산업별로 통계를 제공
-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산업통계를 한 곳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시계열성을 확보
- 다양한 산업분석 콘텐츠를 제공하여 간편하게 산업동향 및 트렌드 확인 가능
- 딱딱한 산업통계를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으로 구성





“분산된 통계를 DB화, 한 곳에서 표준화된 산업통계 검색·활용”

- ISTANS Portal 콘텐츠
 - 주제별·산업별 통계 : 390개, 산업분석정보 : 900개, 신성장동력 : 270개, 국내외보고서 : 180개 등 총 1,730개
 - 온·오프라인 간행물 : 주요산업동향지표, ISTANS 인사이트(기획보고서) 등
- ISTANS DW(데이터웨어하우스)
 - 통계청, 한국은행, OECD, UNComtrade 등 26개 기관, 66개 출처
 - 2,625개 테이블(기관별 1,488개, 주제별 323개, 산업별 650개, 신성장동력 79개, 글로벌 산업통계 43개, 전략시장 42개) 업데이트(2013년)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파악 위한 산업통계 제공”

- 신성장동력 통계 및 콘텐츠 서비스
 - 범국가적 정책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성장동력 관련 기초통계 및 산업분석 정보 콘텐츠 제공
- 3대 전략산업과 신흥국 등 전략시장 통계 서비스
 - 원전, 방위산업, 플랜트 등 3대 전략산업의 기초 통계(생산, R&D, 수출입 등) 제공
 - G20 국가, FTA체결국, 주요 자원보유국 등 39개국·지역 대상으로 4개 주제별 18개 통계 제공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ISTA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IOS용 및 안드로이드용 ISTANS 모바일 앱(App) 서비스 시작
- 주요 콘텐츠 : 산업·무역·투자·에너지 등 주요통계, 분석정보, ISTANS 인사이트 등
- 스마트폰이나 일반 PC에서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검색어 : 산업통계, ISTANS 등)

“국내 최대의 해외산업정보 DB”

KIET 해외산업정보

www.kiet.go.kr

“세계 각국의 국가별·산업별 정보 제공”

- 고급 해외산업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해외산업정보 통합 DB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

“최신 국내외 수집자료 및 KIET 분석자료 제공”

- 국가별 경제 개황, 각국의 산업별 기초 정보, 산업별 국제 동향, 산업통계, 주요 시장 동향, 수출입 및 해외투자 정보, 산업별 분석과 전망 등
- 자료 수록 건수(2014년 6월 말 현재 누계)는 국외수집자료 32,670건, 국내수집자료 20,770건, KIET 분석자료 1,695건 등

“국가별 투자 및 협력 유망산업 정보 제공”

-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나 향후 협력 확대 가능성, 해당 국가의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주요 개발도상국의 국가별 협력 유망 산업에 관한 자료 제공
- 국가별로 정리한 산업별 대세계 수출입 구조와 협력 유망산업 자료
- 51개국(2014년 6월 말 현재)

“해외산업 포럼 발표결과 자료 제공”

- 전문가 초청 지역별(중동, 아프리카) 해외산업 포럼 신설 운영, 발표 결과를 DB에 수록, 정보 제공

“다국어 지원 및 편리한 검색기능 이용”

- Boolean 검색, 국가별 검색, 산업분류 검색, 자료분류 검색, 날짜 검색 등





“국내 유일의 서비스산업통계 DB”

KIET 서비스통계포털

<http://service.kiet.re.kr>

“서비스통계·정보의 One-Stop 제공”

- 국내외 서비스산업 통계를 One-Stop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수행
- 산업연구원과 국내외 기관에서 생산된 서비스산업 관련 분석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 서비스산업 관련 연구 활성화 및 정책수립에 기여



“방위산업 연구 활성화 지원 방산통계”

방위산업통계 DB

비공개

“방위산업 연구의 기본적 통계자료”

- 미래를 주도할 신성장동력 및 수출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인 방위산업 연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위산업통계 작성(2013년)

“방산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

- 산업연구원 방산통계조사는 기존 체계 종합·전문 방산 90여 개 업체에 1, 2차 협력업체 230여 개(2013년도 : SI, 전문방산, 1, 2차 협력업체)를 포함하고, 500여 개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제고



1. 2013년 주요 활동실적
2. 조직·인원·예산
3. 간부 명단
4. 부서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소개



1 2013년 주요 활동실적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미래 신산업 연구 확대

- **미래 신산업 전문연구 조직체계 구성**
 - 미래산업에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 미래산업 연구영역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담당자를 설정하여 정책대응력 강화
- **미래산업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미래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산업연구회' 구성 및 운영
 - '의사가 보는 Health Technology 산업과 R&D :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등 15개 주제 발표
- **'산업창조화 시리즈' 연구 기획 및 수행**
 - 창조형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시리즈로서, 주력산업 부문, 서비스산업 부문, 제조-서비스 연계 부문 등 총론을 포함하여 총 17개 연구과제 기획·추진
 - 미래동력으로서 시장성, 성장성, 글로벌 경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선별하고, 발전 비전, 창조적 경쟁력 강화방안, 일자리 창출방안 등 제시

국가 산업통상정책 지원 기능 강화

- **통상정책부문 및 계량분석부문을 통합한 연구조직 신설**
 -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파트너로서, 산업 단위의 통상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분석실' 신설
 - 한·중 FTA에 대한 심층연구를 위해 중국 전문가 배정
- **산·학·연·정 산업통상 연구협력체계 구축**
 -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산업통상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계, 기업 및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산업전망 포럼' 운영 (총 11회 운영)
- **FTA 협상 대상국과의 산업별 통상전략 관련 연구 추진**
 -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서의 예상 쟁점과 대응방향' 등 10개 과제 수행

산업발전 경험 공유 및 전수사업 강화

- **공적원조(ODA) 관련 연구조직 개편 및 전문 연구인력 채용**
 - 임시조직인 '국제개발협력단'을 '국제개발협력실(정규조직)'로 확대 개편
 -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인력 확충
-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 공유 사업 다양화**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화학공업화 과정의 국제비교' 등 산업개발 경험 매뉴얼 구축사업 추진
 - '한국의 산업분야 ODA 역량과 추진 방안' 등 한국형 ODA 사업 추진
 -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총 12건) 등

중국 경제정책 및 산업현장 모니터링 강화

- **중국 경제에 대한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중국사무소 확대 개편**
 - 중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대·운영하기 위해 '북경사무소'를 '북경지원'으로 격상(2013. 6. 10)

● 중국 경제정책 및 산업현장 정보 상시 제공

	수집원	주요 내용	제공주기
중국경제단신	연구기관 보고서, 주요 일간지 등	중국의 주요 산업·경제 동향, 현지 기업 정보 및 현황, 산업·경제 관련 중국 정부정책 동향 수집 및 제공	월 2회 이상
중국경제 산업정보	중국 국무원	국무원에서 발간한 중국정부의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매월 4~5개 이슈를 정리한 후 제공	월 1회
중국산업동향 브리프	연구기관, 대사관, 중국 현지 한국기업 등	정보교류회 등을 통해 중국의 산업현장 및 시장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월 1회 (창간)

국내외 산·학·연·정 산업정책 네트워크 구축

- **정책연구 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의 다각적인 연구협력 네트워크 운영**
 - 정부부처 장·차관 및 산업연구원장 주관 정책연구협의회 운영(총 3회)
 - 정부부처 국/과와 산업연구원 연구부서 간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운영(총 22회)
-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분야별 연구포럼 기획 및 운영**
 - 산업·통상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포럼' 등 11개 연구포럼 구성·운영
- **중국 국책 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구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현지 전문가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경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현지 연구기관과의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및 협동연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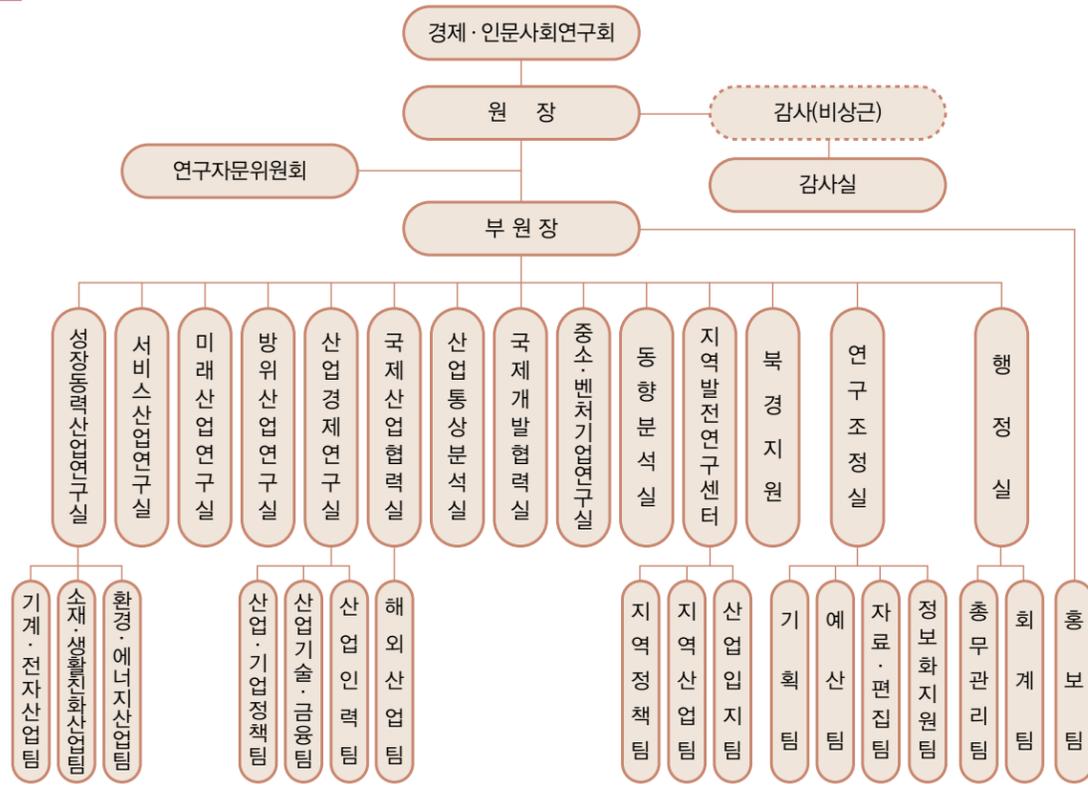
	공동기관	주제 및 연구과제
한중산업포럼 (제5회, 제6회)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제5회) 중국의 도시화 : 현황 및 전망 (제6회) 한·중 미래산업에서의 협력 방향 : 환경, 신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국제세미나	중국 재경전략연구원 RETI(일본), TIER(대만)	한·중 서비스산업 투자협력 방안 Structural Reform and Policy Challenges
공동연구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정부 및 사회과학원	중국 중부3성 주요산업별 진출전략 : 산시성, 안후이성, 장시성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요 산업의 중국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 기계, 석유화학, 차세대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섬서성 발전개혁 위원회 경제연구소	한·섬서성 협력 공동연구 및 협의체 운영
	건흥리서치, HMC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전문 연구소, 국제기구 등 20개 기관과 연구·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세미나 개최 및 협동연구 기획·수행
 -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연구과제 '우리나라 방위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추진전략'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9개 국제협동연구 수행
 - 프랑스 국립학술원(CNRS-INSHS)과의 연구교류 추진 및 한·불 국제학술회의 공동기획

2 조직 · 인원 · 예산

3 간부명단

조직



인원 / 예산

인원

직종	현원 (단위: 명)
임원(원장)	1(1)
연구직	116(86)
전문·행정직	38(1)
계	155(88)

* ()안은 박사학위 소지자

2014년도 예산

구분	수입 (단위: 천원)		지출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구분	예산액
계	27,115,000	계	27,115,000	
정부출연금	16,208,000	인건비	13,462,000	
자체수입	10,907,000	연구사업비	12,597,000	
		경상운영비	1,056,000	

직위	성명	최종학력
원장	김도훈	프랑스 Paris 1대학 경제학 박사
부원장	유진근	텍사스대 경제학 박사
성장동력산업연구실 실장	서동혁	한국외국어대 경영학 박사
서비스산업연구실 실장	박정수	고려대 경제학 박사
미래산업연구실 실장	최윤희	서울대 공학 박사
방위산업연구실 실장	안영수	고려대 경영학 박사
산업경제연구실 실장	주현	서울대 경제학 박사
국제산업협력실 실장	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 박사
산업융합분석실 실장	이진면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국제개발협력실 실장	주동주	영국 맨체스터대 국제개발학 박사
중소·벤처기업연구실 실장	조영삼	고려대 경제학 박사
동향분석실 실장	강두용	서울대 경제학 박사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최윤기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감사실장	고준성	고려대 법학 박사
연구조정실 실장	김동수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정실 실장	김종수	홍익대 공학 석사
북경지원 지원장	이문형	북경대 경제학 박사

4 부서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소개

성장동력산업연구실

주력 제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전략을 연구합니다.

성장동력산업연구실은 주력산업과 융합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실태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연구합니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전자, 소재 등 기존 주력산업의 대내외 환경과 수급구조의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 향상 전략을 연구하며, 고부가 식품, 제약, 고령친화산업 등 신산업의 발전비전과 전략을 연구합니다. 또한, 환경산업 및 정책, 에너지산업의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분야

- 국내외 주요 주력산업과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전망
- 제약, 고령친화산업, 헬스케어산업, 고부가 식품, 3D 프린팅 등 융합 신산업 발전전략
- 주요 산업의 중장기 발전비전
- 창조경제, 융합, 신성장동력 전략 등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산업발전전략
- 한·중 산업협력 방안, FTA의 산업별 영향 연구
- 환경산업, 환경정책 및 규제, 에너지산업 연구 및 자문
- 산업분석을 위한 산업·기업 차원의 통계DB 구축 및 운용

● 연구진

서동혁	실장	경영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광순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건국대학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미국
정만태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국민대학교
송병준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미국
김주한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고려대학교
한기주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미국
주대영	연구위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남장근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Kobe University, 일본
전재완	연구위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정은미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홍성인	연구위원	경제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박 훈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서강대학교

곽대중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경숙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김종기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경희대학교
김경유	연구위원	무역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혜선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강승철	연구위원	에너지자원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이임자	부연구위원	경제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강민성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모정윤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미국
이 준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미국
조용원	부연구위원	농업경제학 박사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미국
최동원	부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조은정	연구원	경제학 석사	경북대학교
이고은	연구원	재료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김민지	연구원	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허선경	연구원	국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김성진	연구원	Global MBA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4 부서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소개

서비스산업연구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합니다.

서비스산업연구실은 국내외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정책을 파악하고 업종별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생산성 제고, 서비스 R&D 활성화, 제조업 지원기능 강화, 신성장서비스 발굴, 서비스고용 촉진 등 기능별 연구와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교육, 방송통신, 콘텐츠, 유통·물류, 개인서비스, 관광산업 등 업종별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분야

- 서비스 업종별 발전전략 연구
- 서비스산업 혁신모형 개발
- 서비스 R&D 활성화 정책 연구
-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 연구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정책 연구
- 수요 변화와 서비스산업의 연관성 분석
- 융합서비스 및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정책
-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정책 연구
- 서비스산업 DB 구축 및 운용

● 연구진

박정수	실장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최봉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김홍석	연구위원	무역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조현승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Indiana University, 미국
박문수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미국
김천곤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미국
김숙경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고대영	부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이상현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미국
구진경	부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이동희	부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KAIST
진혜진	연구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박지혜	연구원	경영학 석사	중앙대학교
이순학	연구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미래산업연구실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연구합니다.

미래산업연구실은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시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우리나라 미래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아이디어, 기술, 문화, 예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융합적 신산업을 포괄합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IT, BT, NT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기술 간, 제품 및 서비스 간의 융합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 건강·편리·안전 등 삶의 질과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가치융합형 제품 및 서비스가 미래산업에 포함됩니다. 미래산업연구실은 '창조적 미래유망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원내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하여 우리나라 미래 경제의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연구분야

- IT, BT, NT 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의 발굴과 시장 전망
- 인문·예술 분야를 포괄하는 가치융합적 미래산업의 발굴과 시장 전망
- 수요(소비자)의 선택성 및 다양성에 부합하는 미래산업의 발굴 및 시장 전망
- 발굴된 미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 방향 연구
-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정책 연구

● 연구진

최윤희	실장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김원규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미국
김상훈	연구위원	이학 박사	University of Oxford, 영국
신운성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미국
황원식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최광훈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김승민	연구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이경실	연구원	기술경영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심우중	연구원	이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정혜린	연구원	인도아세안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4 부서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소개

방위산업연구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전략을 연구합니다.

방위산업연구실은 국가 전략산업이자 첨단 융합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연구합니다. 국방전력소요 경제성 분석 및 사업타당성 연구를 통해 국방전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방산수출 및 민군기술융합 방안,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분야

- 방위산업 발전 정책 연구
- 국방전력소요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 연구
- 방위산업 수출 정책 연구
- 민군기술융합 정책 연구
- 항공우주산업 정책 연구

● 연구진

안영수	실장	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은미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장원준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김창모	연구원	경제학 석사	Georgetown University, 미국
김미정	연구원	국제통상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윤자영	연구원	법학(항공우주법) 석사	한국항공대학교
민현기	연구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산업경제연구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산업경제연구실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을 연구합니다. 산업정책 연구는 한국의 산업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와 방향 제시, 그리고 기술정책, 인력정책 등 다양한 기능별 정책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정책 연구는 공정경쟁, 규제개혁, 경쟁력 등의 관점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분야

- 산업발전의 비전 및 정책방향
- 산업구조의 변화요인 분석
-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동향과 정책
- 고용 및 산업인력 동향과 정책
-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 규제개혁 정책의 현안과 방향
- 기업환경 개선 대책

● 연구진

주 현	실장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고동수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Florida, 미국
오영석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조윤애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이건우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Keio University, 일본
김인철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미국
이상규	연구위원	산업경영학 박사	KAIST
최희선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미국
노영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미국
최현경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미국
성열용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ittsburgh, 미국
김주영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미국
하 준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최재영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김영민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백웅재	연구원	경제학 석사	University of Colorado, 미국
유경진	연구원	기술경영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4 부서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소개

국제산업협력실

산업세계화와 국제산업협력 정책을 연구합니다.

국제산업협력실은 국제분업구조와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투자의 새로운 동향과 현안을 분석하고 다자간, 양자간 통상체제에서의 산업협력 방향을 연구합니다. 국제산업협력을 위해 주요국의 경제·산업동향과 산업협력 정책을 연구하며,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중동지역을 비롯한 신흥경제와의 산업협력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을 연구하고 대개도권 개발협력모델 수립을 지원합니다.

● 주요 연구분야

- 무역, 외국인투자의 동향 분석과 정책 연구
- 국제분업구조 변화동향 분석과 대응 정책
- WTO, FTA 등 다자간, 양자간 통상체제에서의 산업협력 및 규범 연구
- 동북아 지역 산업통합과 산업협력 정책
- 중동,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 개도권지역과의 산업협력 정책
- 북한 경제·산업 분석과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연구
- 대개도권 개발협력모델 수립 지원 및 사업 평가
-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 분석 및 DB 구축

● 연구진

조 철	실장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심영섭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Grenoble, 프랑스
장윤종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aris X, 프랑스
하병기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미국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법학 박사	고려대학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김학기	연구위원	러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한국외국어대학교
사공목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Keio University, 일본
김계환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프랑스
민혁기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미국
심완섭	연구위원	생산공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문종철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LA, 미국
조재한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Arizona State University, 미국
정근주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빙현지	연구원	경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원교	연구원	통번역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민지	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경희대학교
이승엽	연구원	북한학 석사	동국대학교
김양평	연구원	상학연구 박사후기과정 수료	니혼대학교, 일본
강지연	연구원	중국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산업통상분석실

산업·무역 및 통상협정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수행합니다.

산업통상분석실은 산업·무역활동에 대한 DB구축 및 계량적 분석·전망모형 개발, 통상협상 분석 등 산업·통상 정책수립을 위한 정량적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상협상의 효과분석을 통해 협상전략과 국내 대책을 수립하고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 주요 연구분야

- 국내외 산업·무역의 DB구축 및 통계분석
- 산업·무역 계량모형의 개발 및 활용
-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 통상협상 효과분석 모형의 개발 및 활용
- 통상협상의 전략수립 및 정책방향 제시
- 통상협정에 따른 국내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 기타 산업·통상 관련 조사·분석

● 연구진

이진면	실장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김화섭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영남대학교
김수동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미국
김재덕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김바우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김재진	연구원	정보통계학 학사	고려대학교
한정민	연구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이용호	연구원	경제학 석사	University of Connecticut, 미국
박가영	연구원	경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4 부서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소개

국제개발협력실

개발협력정책 연구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구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한 개발협력정책과 공적개발원조를 연구합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국내외 산업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분야

- 국제개발협력 정책 연구
- 산업 분야 ODA 동향과 정책 연구
-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 전략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자문
- UNIDO, ADB 등 국제기구와 개도국 산업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

● 연구진

주동주	실장	국제개발학 박사	University of Manchester, 영국
김기환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미국
안옥윤	책임전문원	영문학 학사	가톨릭대학교
임소영	부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윤정현	연구원	국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강지현	연구원	경영학 석사	University of Paris Descartes, 프랑스
김경석	연구원	국제통상학 석사	고려대학교
우석균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김지혜	연구원	국제개발학 석사	University of Manchester, 영국
정선인	연구원	국제개발협력학 석사	경희대학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실은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을 둘러싼 기업생태계를 연구하여 기업 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분야

- 국내외 중소·벤처기업 현황 분석과 전망
-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환경 분석과 전망
- 기업가정신 함양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정책 연구
- 분야별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연구
- 중소·벤처기업 실태조사 및 정책성과 분석
-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전략 연구
- 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 연구
- 외국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연구

● 연구진

조영삼	실장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양현봉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전남대학교
조덕희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홍지승	연구위원	과학기술학 박사	고려대학교
이영주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건국대학교
홍석일	연구위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지민웅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Boston University, 미국
신종원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VP&SU(Virginia Tech), 미국
한창용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4 부서별 연구분야 및 연구진 소개

동향분석실

실물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합니다.

동향분석실은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을 파악하여 주요 경제변수가 국내 산업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위해 경제·산업분석 계량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며 산업구조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연구분야

- 국내외 거시경제 및 수출입 동향 분석과 전망
- 실물경제 현안 분석과 산업별 파급효과 및 대응정책 연구
- 전망 모형, 산업별 경기지표 등 계량모형 및 지표 개발
- 제조업 경기실사 및 산업구조 통계 조사

● 연구진

강두용	실장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윤우진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미국
신현수	연구위원	무역학 석사	서울대학교
민성환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이상호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황선웅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이상연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이원복	부연구위원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홍성욱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미국
박성근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정인환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지역발전연구센터

지역발전정책과 지역산업의 발전전략을 연구합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는 지역정책, 지역산업, 산업입지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고 정책과제를 연구합니다.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클러스터, 투자, 혁신인프라, 지역혁신 거버넌스에 관한 정책연구와 사업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한 산업입지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입지규제 개혁,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지원, 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주요 연구분야

- 지역발전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해외 지역발전정책 분석
-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
- 지역혁신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 연구
-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
- 산업입지정책 수립과 동향 분석
- 입지규제 개혁
- 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 방안
- 지역통계 DB 구축 및 운용

● 연구진

최윤기	소장	경제학 박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미국
장재홍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경북대학교
박형진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미국
송하울	연구위원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
홍진기	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정종석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김정홍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김영수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김선배	연구위원	경제지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박재근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고려대학교
허문구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오사카부립대학, 일본
송우경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대학교
이원빈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연세대학교
변창욱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이두희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Clemson University, 미국
김찬준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고려대학교
정윤선	부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최준석	부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홍세진	연구원	도시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김현우	연구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김영민	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2014년도 연구방향

2014년도 연구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

연구방향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모색

- 중점 연구목표
- 목표 1. 창의,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산업 육성
- 목표 2.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 목표 3.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업정책 제시
- 목표 4.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지역산업생태계의 활성화
- 목표 5.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



연구사업 운영방향

연구방향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모색

- 창의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주력산업과의 융합·확산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시장·일 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의 확산과 동력을 강화하도록 산업발전 전략 모색
- 목표 1 : 창의,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미래산업 육성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 제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함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미래유망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창의', '융합' 등을 통해 주력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유망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화, 수출화 등 다각적인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 제시
- 목표 2 : 창조형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 제조업과 서비스, 특히 연구개발, 컨설팅, 디자인 등 전문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전문서비스업 육성
 - 전통서비스 위주의 서비스산업 구조를 지식 및 기술기반 중심의 창조형 서비스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모색
- 목표 3 :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업정책 제시
 - 일자리 창출형 창조경제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경제부문 간 균형발전, 국제분업의 효율화, 공정경쟁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제도 구축 등 최적의 산업·기업정책을 모색할 필요
- 목표 4 :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지역산업생태계의 활성화
 - 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경제 권역별로 창조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수
 - 지역경제권역의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인프라와 융합산업의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산업 간 연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산업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추진
- 목표 5 :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
 -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기업의 세계화의 확산에 맞춰 주요 산업별·신흥국 지역별로 비즈니스 협력 및 산업협력 모델을 차별화하고, 신흥국을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원천으로서 구체화 방안 제시
 -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주요 경쟁국들과의 FTA 추진 전략을 연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과 추진전략 모색

2014년도 중장기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가치사슬 재편과 융합화를 통한 제조업의 신성장전략	서동혁
중소기업의 성장장벽 유형과 해소방안	조영삼
서비스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 : 분야별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	박정수
글로벌 밸류체인에 기반한 주요 국가별 산업특성 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	조철
글로벌 통상질서의 개편과 우리산업의 대응방안	이진면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방안	최윤희
환경·에너지 시설의 입지문제 해결방안	전재완
한국의 기술융합 발전트렌드 및 융합기술개발 결정요인 분석	최재영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 지식집약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동희
기술창업기업의 지방 입지촉진 및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	김정홍
창조경제를 향한 한국산업의 구조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윤우진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진입규제 분석	최현경
효과적인 통상협력 추진을 위한 산업정책의 기능적 역할 정립 방안	이상규
중국인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및 산업연계 활용방안	박문수
지역산업정책의 개선방향과 추진과제	박재곤
한국의 성장동력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 과제 : 일자리 창출형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장석인
자동차부품산업의 동반해외진출에 따른 경쟁력 및 성과변화 분석	김경유
스포츠시장 가치망에 따른 통계 작성과 정책 방향	김화섭
Big Data 기술 도입의 파급효과와 미래산업으로의 발전방안	신윤성
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고동수
산업별 해외투자의 현황분석과 진출기업의 유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문중철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이상현
창조산업의 공간분포와 집적형성 요인 분석	장재홍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바이오화학산업의 정책과제	남장근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실태와 정책과제	홍지승
대내외 경제충격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황선웅
전자의료기기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 과제	이경숙
기술혁신 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노영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정책과제	조덕희
국제가치사슬 구조에서 본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정책과제	김재덕
CLMV 국가의 에너지 보급을 위한 개발협력 프로그램 연구	임소영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발전과제	김중기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영 현황과 국내경제 파급효과 분석	하병기

KIET 2013 연차보고서

●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 김도훈
 발행처 : 산업연구원
 등 록 : 1983년 7월 7일 제6-0001호
 주 소 :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 화 : 02-3299-3114
 팩 스 : 02-963-8540
 문 의 : 자료·편집팀 02-3299-3151
 인쇄처 : (주)유성사

